CNI 세미나 2024-062

2024 제1차 사회 갈등-협력 연구회 자료집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2024 제1차 사회 갈등-협력 연구회 개최

Ⅰ. 연구회 개요

▢ 목 적

○ 현재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 경제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

○ 이에 충청남도 시군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및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함

▢ 추진방향

○ **(정책공유)** 상생협력, 일자리 정책추진, 경험, 성과 등 공유

○ **(정보교류)** 지역상생 및 공동체활동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토의

▢ 연구회 개요

○ 일　　시 : 2024. 9. 26.(목)~27.(금)

○ 장　　소 : 통영리스타트플랫폼,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현장

○ 참 석 자 : 약 10명

- 충남연구원 연구회 회원,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관계자,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계자,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관계자 등

Ⅱ. 주요 행사계획 및 일정

○ 통영시 도시재생 사례 발표

- 통영시 도시재생 추진 방향과 추진현황
- 통영시 둘레길 프로그램 및 골목재생 운영 사례
-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할

○ 토 론 : 지역상생 및 공동체활동 확산 방향

□ 행사계획

○ 1일차 : 2024. 9. 26.(목)

시 간		내 용	비고
09:00 ~ 12:00	180′	◦ 통영시 이동	
12:00 ~ 13:30	90′	◦ 점심식사	
13:30 ~ 16:00	150′	◦ 통영 남피랑길 29코스 탐방 (통영시 골목재생 우수사례)	해설사 현지탐방
16:00 ~ 18:00	120′	◦ 통영시 리스타트플랫폼 현장탐방	폐조선소 재생사업 성공사례

○ 2일차 : 2024. 9. 27.(금)

시 간		내 용	비고
10:00 ~ 12:00	120′	◦ 공동체 활동과 갈등관리 워크숍	통영시도시재생센터
		- 통영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함의	정오락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과 사회통합의 방안	전지훈 선임연구위원 (시도지사협의회)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조성 교수 (원광대학교)
		-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 13:30	90′	◦ 점심식사	
13:30 ~ 15:00	90′	◦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현장탐방	주택가 도시재생 성공사례
15:00 ~ 18:00	180′	◦ 공주시 이동 및 해산	

▢ 참석자 명단

이름	소속	직책
고 승 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사회통합연구실장
이 홍 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장 창 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임 다 정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오 혜 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전 지 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외부관계자)
조 성	원광대학교	교수(외부관계자)

▢ 통영 남피랑길 29코스 (길이 17.6km, 소요시간 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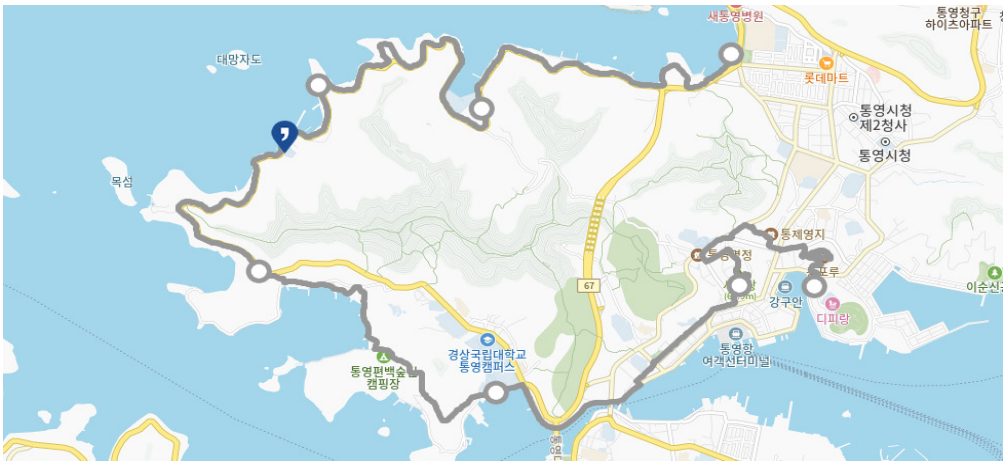
○ 개요

- 통영 이야기길을 따라 통영을 대표하는 동피랑마을, 서피랑마을, 해저터널 등 핵심 자원을 두루 경유하는 코스
- 동피랑 벽화마을, 서피랑 공원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예쁜 어촌마을을 볼 수 있으며 평인일주도로에서는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활기찬 통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

○ 주요포인트

-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있는 담벼락마다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끄는 관광 명소 '동피랑 벽화마을'
- 임진왜란 후 한산도에 있던 삼도수군 통제영이 통영으로 옮겨지면서 지어진 객사 건물인 국보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 언덕을 올라 아름다운 강구안을 볼 수 있는 '서피랑 공원'

-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통영시립박물관'
- 작곡가 윤이상 기념관 및 기념공원
-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이자 근대문화유산인 통영 해저터널



▢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 개요

-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창업자와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창업 지원 공간으로, 통영시와 LH가 조선소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6개의 입주단체와 소극장, 전시공간, 회의실, 강의실 등 다목적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통영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

사업전망
Vision

통영시민들의 제2의 삶을 위한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구축

☐ 통영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 개요

- 통영시 봉평동에 위치한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은 통영시에서 2017년 선정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낡은 주택가에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광장을 만들고 주변 주택들을 리모델링해 주민거점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한 공간

목차

Ⅰ. **통영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함의** 11

통영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정오락 센터장

Ⅱ.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과 사회통합의 방안** 41

시도지사협의회 전지훈 선임연구위원

Ⅲ.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59

원광대학교 조성 교수

I

통영시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함의

정오락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통영시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함의

2024. 9. 27.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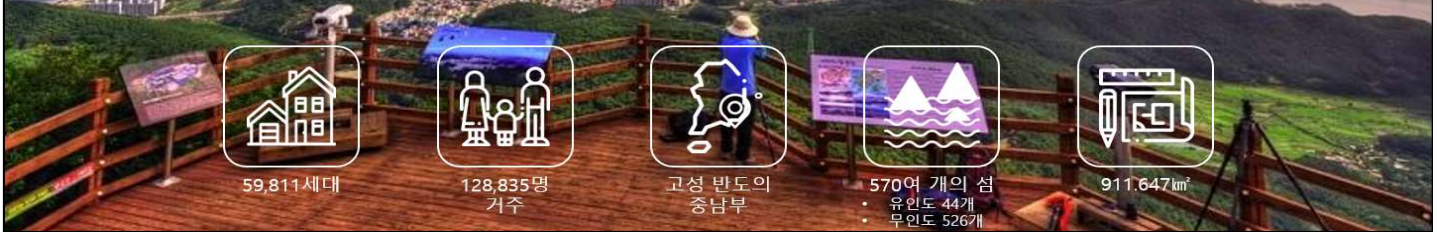
TONGYEONG CITY OF MUSIC 바다의땅 통영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5

통영시의 특징과 사업 배경

통영시의 특징

우리가 사는 통영은 작은 도시지만 좁지 않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역동적인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도시로 흘러 들어온 다양한 문화를 섞어내고 색을 입혀
지금의 통영이 가진 자부심을 만들어 냈다.

통영 統營



제1기 통영 르네상스

제1기 통영 르네상스, 통제영문화와 12공방

1604년 삼도수군통제영 본영이 있던 곳, 통제영의 12공방,

호방한 풍류와 뛰어난 공예가 어우러진 통제영 문화,

갓, 나전칠기, 소반 등 우수한 공예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 또한 무수한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었던 바탕.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사람, 문화, 활동이 섞이고 정착하는 장소

통영만의 독특하고 인상적인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통영의 제1기 문화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2기 통영 르네상스

제2기 통영 르네상스, 통영문화협회

긴 시간 동안 이어오며 축적된 **통제영 문화가 무수한 예술가 배출의 원동력**이 되어

통영의 해방공간에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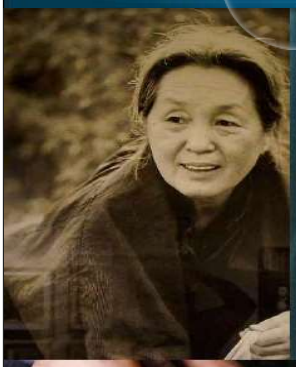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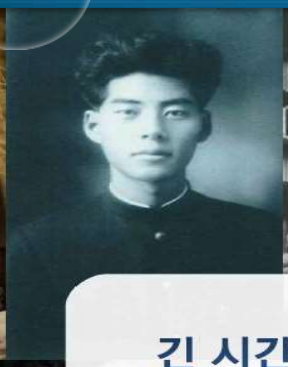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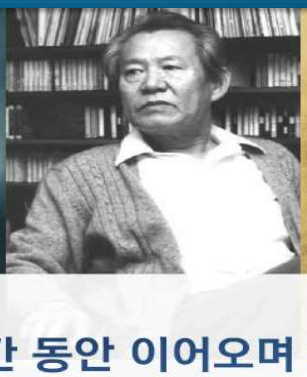
화가 하태암, 전혁림, **연극가** 박재성, **음악가** 최상한, 정윤주, 윤이상, **시인** 김춘수, 배종혁, 유치환, **문화활동가** 옥치정, 정명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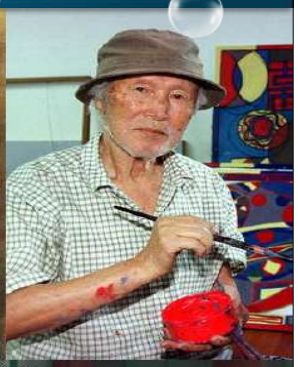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통영문화협회**를 결성

문화예술의 **개인적 창작활동보다는 통영의 문화 부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는 **당시의 절박했던 사회상과 그들의 향토에 대한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시 자체가 예술인 통영시



긴 시간 동안 이어오며 축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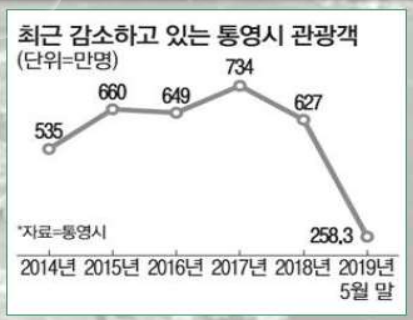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역사를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통영

문화 외에도 가진 것이 많은 통영시

수산, 공예, 관광, 해양레저, 조선산업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진 도시

통영시의 쇠퇴와 위기



조선, 관광 등의 주요 산업에서 위기 직면

(출처) LH 통영 신아조선 도시재생 뉴딜 계획안 중 발췌

통영시의 갈등과 격차

갈등과 격차의 심화

통영시 3기 르네상스는 ? _ 전환점 필요

한산신문 기사 발췌 _ 남해의 봄날, 통영이라 고마워요 정은영 대표 "통영시민들의 문화감수성 감탄스러워"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50

통영시가 가진 자부심의 근거

해양수산 – 조선소, 중앙시장, 서호시장, 요트, 마리나

문화관광 – 야간관광, 동피랑, 국제음악당, 케이블카

생태환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섬 –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 매물도, 미륵도, 참치, 고등어

역사교육 – 삼도수군통제영, 이순신, 12공방, 제승당

통영시 가진 것이 너무 많다...

해양수산 + 도시 =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도시

문화관광 + 도시 = 야간관광특화도시

생태환경 + 도시 = 환경교육도시

섬 + 도시 = 동양의 나폴리

역사교육 + 도시 = 바다 지킨 용의 도시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현안 개선방안

도시의 구성요소 _ 空間+人+關係

공간(Space)

토지 (land)
시설 (Facility)

\+

사람(Citizen)

거주 (live)
일 (work)

\+

활동(Activity)

생활, 생산
위락, 교통

도 시

Space와 Place의 차이 _ 공간과 장소

공간 (Space)

물리적 공간
H/W

+

가치(Value)

스토리(Hi-Story)
경험(Experience)
기억(Memory)
창조(Creative) ...

=

장소 (Place)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2020, Yi-Fu Tuan)
★시간과 공간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 방향성을 지닌다. 계획=목표

도시란 무엇인가? 사람들이란?
그렇다, 사람들이 도시다. (코리올리누스 3막 1장)

통영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15개 중 4개 완료, 11개 추진)

2024년 통영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도시재생뉴딜사업 (3개소)

지구명	선정연도	사업기간	면적(㎡)	사업비(백만 원)	사업내용
봉평 (경제기반)	2017	2018. ~ 2024.	509,687	689,650	리스타트푸드랜드 및 12스쿨 리모델링 도크 해모리엄 해양공원 조성 당신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도천 (원도심권)	2020	2021. ~ 2024.	127,298	14,280	세대공감 한울타리, 음악마을 아트홀(4층) 복합 신축 윤이상 음악거리, 달무리광장 조성 등
정량 (주거지지원)	2019	2019. ~ 2024.	67,658	14,993	어울림공간(4층), 지식공방(2층), 조망터(2층), 판매시설(1층) 홈커밍하우스(1층) 신축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 (새뜰마을사업)

태평	2020	2020. ~ 2024.	35,350	3,920	주민교류 거점공간(3층), 골목길 보행환경개선, 주택정비 지원사업 등
통제영	2023	2024. ~ 2028.	113,500	4,143	에르센사랑방(1층) 신축, 안전 확보사업, 노후주택 정비 등
중앙	2019	2019. ~ 2024.	48,070	3,423	창골구릉미(2층) 신축,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범죄·안전 예방사업 정비 등
당동	2023	2023. ~ 2027.	36,216	4,003	판데이음센터(2층) 신축, 안전 확보사업, 노후주택 정비 등
도선	2023	2023. ~ 2026.	69,240	2,211	경로당 증개축,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등
노전 선창	2023	2024. ~ 2027.	55,000	1,920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활·위생인프라 조성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원 등
적촌	2023	2024. ~ 2027.	61,028	1,873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활·위생인프라 조성사업, 주택정비사업 지원 등
용초	2020	2020. ~ 2024.	69,700	2,220	마을회관 리모델링, 창고 및 공동화장실 조성, 안길 정비, 주택정비 지원사업 등

통영시 도시재생 주요사업(뉴딜사업+새뜰마을)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 _ 봉평지구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18 ~ 2024 / 6,771억원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 _ 정량지구

정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19 ~ 2024 / 168억원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도시재생 PROJECT

주거복지실현

주거인프라 확보
- 소방도로 개설
- 마을주차장 조성
- 다목적 공원 및 쉼터 조성
- 공동 편의시설 제공

주거공간 재생
- 공공 임대주택 조성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안전골목길 사업
- 취약계층 보행체계 개선

관광자원활성화

자생사업 발굴
- 멘데마을 반찬가게
- 나눔광장 조성
- 언덕마루 게스트하우스

머무는 마을 조성
- 청마 이야기공원 조성
- 여행자쉼터 조성
- 통영항조망터 설치
- 도시숲조성사업(부처연계)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
-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 체험교실 운영

공동체공간 조성
- 언덕마루 어울림 공간
- 마을 자식창고
- 공동체 작업공간 (텃밭 및 작업장)

통영시 도시재생 사업 _ 도천지구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21 ~ 2024 / 142.8억원

마중물사업

A Con brio도천 : 활기찬 생활 기반의 조화 32.0억원

1 세대공감"한울타리"조성사업 25.6억원
- HW 세대공감"한울타리"조성 (21.8억원) :통영시내 커뮤니티+생활SOC(경로당+노인교실+어린이도서관)
- SW "장수만세 - 건강백세 도전" 사업 (3.8억원) :생활밀착 및 경제 활력프로그램 운영

2 안심마을조성사업 6.4억원
- HW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1.2억원) : 총13곳 (지붕정비 4곳, 외부수리9곳)
- HW 안심쉼터 정비 (0.45억원) : 기존 주민 쉼터정비 (2개소)

B Con brio도천 : 활기찬 생활 기반의 조화 18.2억원

1 청년 둥지틀기 사업 6.6억원
- HW 상생협력상가조성 (5.4억원) : 통영관내 취 ·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 창업 실현 공간 제공
- SW 창업활성화 지원 (1.2억원) : 상가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년간)

2 윤이상 음악거리 조성사업 11.6억원
- HW 음악거리 조성_보도정비 (7.7억원) : 음악을 주제로 한 테마가로로 정비
- HW 디지털 안내판 및 경관조명 설치 (2.9억원) :디지털안내표지판 (5개소), 경관특화사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C Con brio도천 : 활기찬 생활 기반의 조화 92.6억원

1 달무리 광장 조성사업 14.2억원
- HW 달무리 광장 조성(14.2억원) : 주민교류공간 및 문화행사 공간 조성

2 음악마을 아트홀 조성사업 66.3억원
- HW 음악마을 아트홀 조성(40.2억원)
- SW 디지털재생기반구축 사업(15.1억원)
- SW 음악마을활성화 사업(3.5억원)
- SW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7.5억원)

3 주민 · 상인역량강화사업 12.1억원

부처 연계사업 15.7억원

부-1 통영시 문화도시 예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6억원)
부-2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11.1억원)

지자체 사업 160.6억원

지-1 2022 통영국제트라앤날레 [경상남도 + 통영시] (80.0억원)
지-2 도천(중앙유치원-만유빌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6.6억원)
지-3 도천(중앙유치원-도천아파트 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5.0억원)

통영시 새뜰마을 사업 _ 태평지구

태평지구(주전골) 새뜰마을 조성 : 2020 ~ 2024 / 39.2억원

통영시 새뜰마을 사업 _ 중앙지구

중앙지구(창골마을) 새뜰마을 조성 : 2019 ~ 2024 / 34.2억원

② 마스터플랜(MP)

주민 활력을 담는 보고(寶庫) 창골 새뜰마을
동백 꽃 피는 창골마을

안전확보
-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노후골목길 포장 / 계단 및 안전시설물 설치
  - 측구 및 노후담장 정비
- 범죄 • 안전예방 및 노후위험시설 정비사업
  - 범죄예방시설 설치 (CCTV / 보안등 / 고보리이트 설치)
  - 노후 위험석축정비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생활 · 위생 인프라
- 주민생활편의시설
  - 구르미 마을 행복자장소 (주민 커뮤니티 거점공간)
  - 주민 휴게쉼터 조성
- 기초기반시설 정비 및 위생여건 개선
  - 주민참여 창작 생활예술 골목길 조성사업 (천일 ArtRoad 조성)

주택정비 지원
- 슬레이트지붕 개량 (28호)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44호)
- 빈집철거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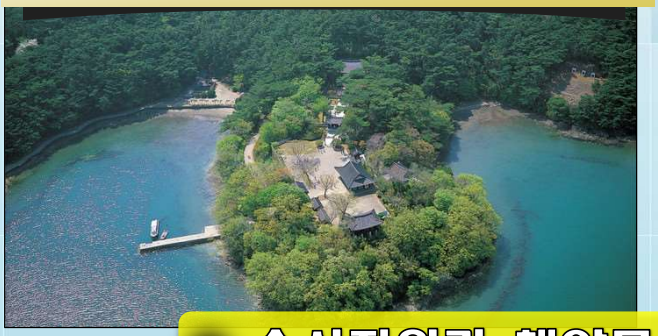
휴먼케어
- 주민공동체 활성화지원
  - 건강돌봄 프로그램
  - 한올타리 밥상
  - 마을카페 사랑방
  - 마을상회 사업단
  - 집수리 사업단 (교육훈련 및 타 협동조합 창업지원)
- 마을행사 지원 및 운영
  - New 봉래극장 마을축제
  - 통영성 역사마을 스토리텔링 북

주민역량강화
- 주민대학 운영
- 마을동아리 운영
- 생활예술창작프로그램 운영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충무공 이순신의 도시 藝鄕 통영

1593년 삼도수군 통제영 한산도 최초 설치



통제영 공인 중심의 12공방(갓·소반·자개·화폐)

수산자원과 해양문화관광을 통한 도시발전

온화한 기후와 청정해역 (윤이상·박경리·김춘수·유치환)

통영, 조선산업기반 산업경제의 위기

중소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남해안 조선벨트가 무너지고 있다.
"거제의 대형 조선소는 그나마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중소 조선소가 많은 통영은 위기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목선(어선) → 중소형 선박 제조, 세계 10위

- 46최기호, 76신아, 78·91대우조선, 06SLS
- 통영토종기업, 시민회사(직원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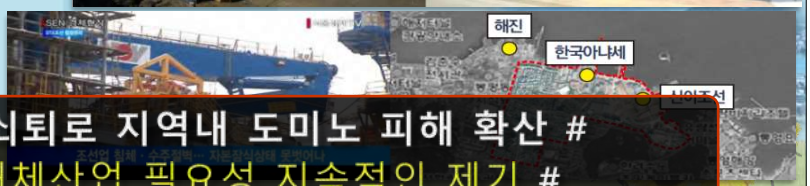
통영 최대 규모 신아SB 2015년 부도
관련업 5,000여명 근로자 대거 실직

- 신아조선 근로자 가족 대규모 지역이탈
- 한국야나세, 해진조선소 경영 악화

원룸지역 공실, 주택폐가 대량 발생

- 조선소 부근 공실로 인한 지역 공동화 심각
-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쇠퇴

관련업종의 추가적 부도 우려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지역내 도미노 피해 확산
새로운 조선업의 대체산업 필요성 지속적인 제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신아조선소 변천사

초창기 생계와 교통수단이었던 나무배 제작소

2010년 세계 10대 조선소 (전성기)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

2018년 세계조선업 불황으로 파산 정리된 조선소

The Land of Sea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개요

사업유형	경제기반형
사업명칭	문화 · 관광 · 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위치	통영시 도남로(구.신아sb) 일원
사업면적	509,687㎡ (폐조선소 174,645㎡ 포함)
사업기간	2018 ~ 2024년 (연장예정)
사 업 비	6,772억원

- 재정보조 417억원 (국비 250, 도비 50, 시비 117)
- 부처연계 371억원
- 통영시 304억원
- LH 1,200억원
- 민간투자 4,480억원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봉평지구(신아sb포함) 도시재생뉴딜사업

2015 2015. 11. 26. : 신아sb 조선소 파산

2017 2017. 12. 14. : 2017년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최종 선정

2018 2018. 04. 27. : 신아sb 부지 매입 완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8. 07. 27. :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시의회 동의

2018. 07. 30. :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체결 (경남도~통영시~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09. 10. :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국제공모 최종 발표

2019 2019. 09. 02. : 봉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

2019. 10. 14. : 통영시~LH 재정보조(마중물)사업 세부 협약 체결

2019. 12. 10. :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준공 및 개소

2020 2020. 10. 21. : 폐조선소 재생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LH ▶ 통영시)

2020. 12. 07. : 신아sb별관(통영 12스쿨 플랫폼) 리모델링 착공

2021 2021. 05. 17. :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1. 06. : 구.신아sb 별관(통영 12스쿨 플랫폼 -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

2021. 07. 07. :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경남도 제출

2021. 12. 01. :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운영주체 변경 (LH ▶ 통영시)

2023 2023. 06. 29. : 통영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경남도)

통영폐조선소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요약)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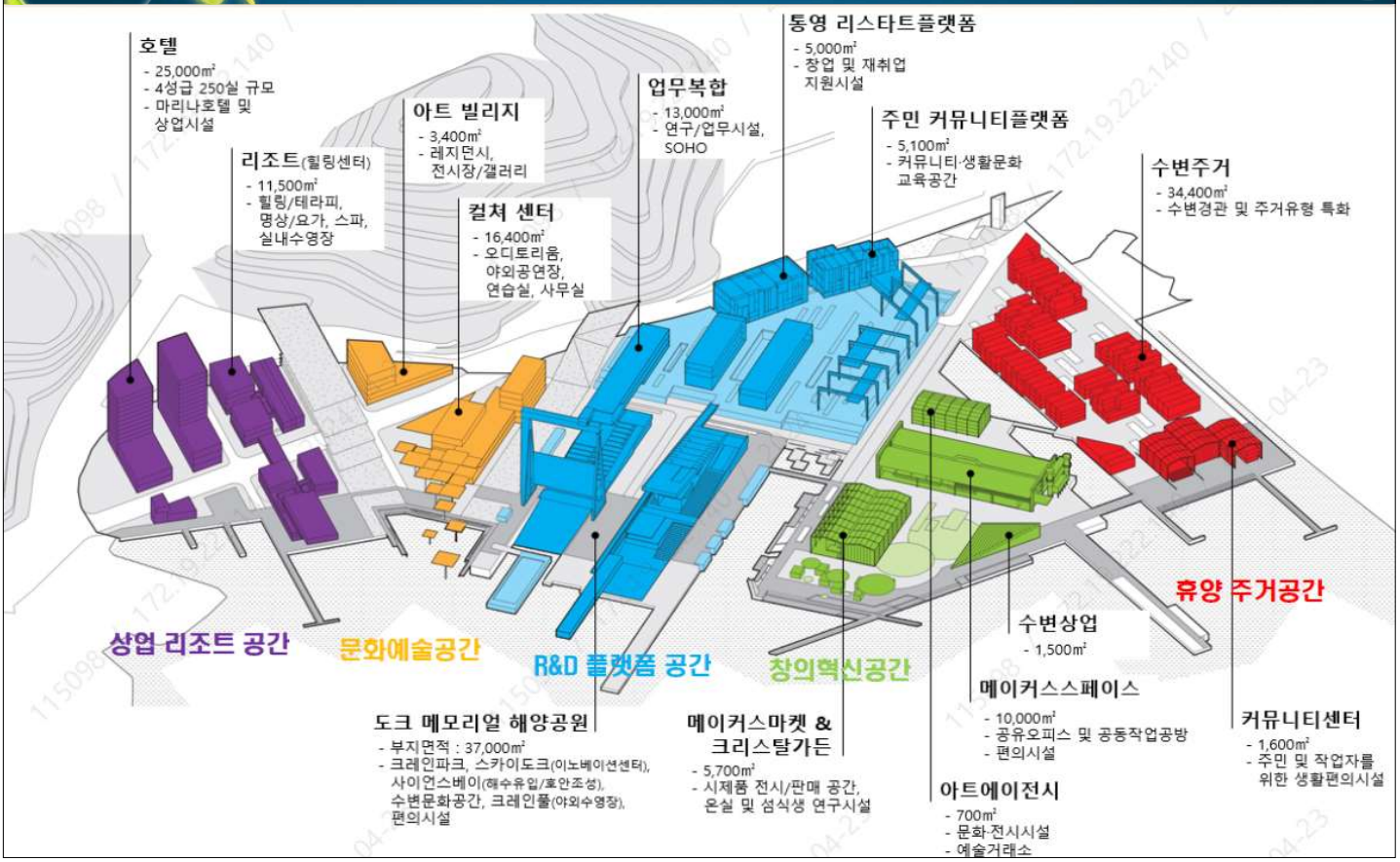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79,903	100.0	
상 업 용 지		27,727	15.4	
관 광 시 설 용 지		11,628	6.5	
주 상 복 합 용 지		16,088	8.9	
업 무 복 합 용 지		22,607	12.6	
연 구 지 원 용 지		4,653	2.6	
산 업 복 합 시 설 용 지		8,304	4.6	
문 화 복 합 용 지		4,743	2.6	
도시기반시설용지	소계	84,153	46.8	
	도 로	31,682.4	17.6	
	주 차 장	8,493	4.7	
	문 화 공 원	30,691	17.1	
	녹 지	1,949	1.1	
	하 천	548	0.3	
	광 장	9,144	5.1	
	공공청사(존치)	1,645.6	0.9	

-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국내, 건축)
- 주식회사메타기획컨설팅(국내, 문화관광콘텐츠)
-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국내, 도시·건축)
-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국내, 부동산컨설팅)
- Henn GmbH(독일, 건축·도시·조경)
- ㈜에스엘에이엔지니어링(국내, 건축)
- ㈜유신(국내, 도시·토목·교통)
- ㈜인우플랜(국내, 조경)

통영폐조선소 재생 국제공모 당선작(2018)

통영폐조선소 재생 국제공모 당선작(2018)

통영폐조선소 재생 국제공모 당선작(2018)



국제공모 이후 주요 사업계획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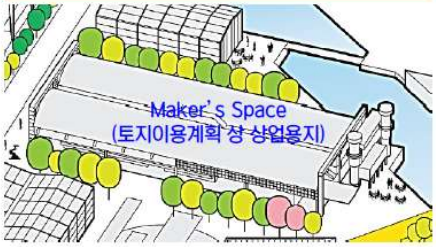
국제공모 당선작 조정(‘19)	구역지정 제안(‘20)	구역지정(‘23)

- 총괄계획단 회의, 경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 반영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23.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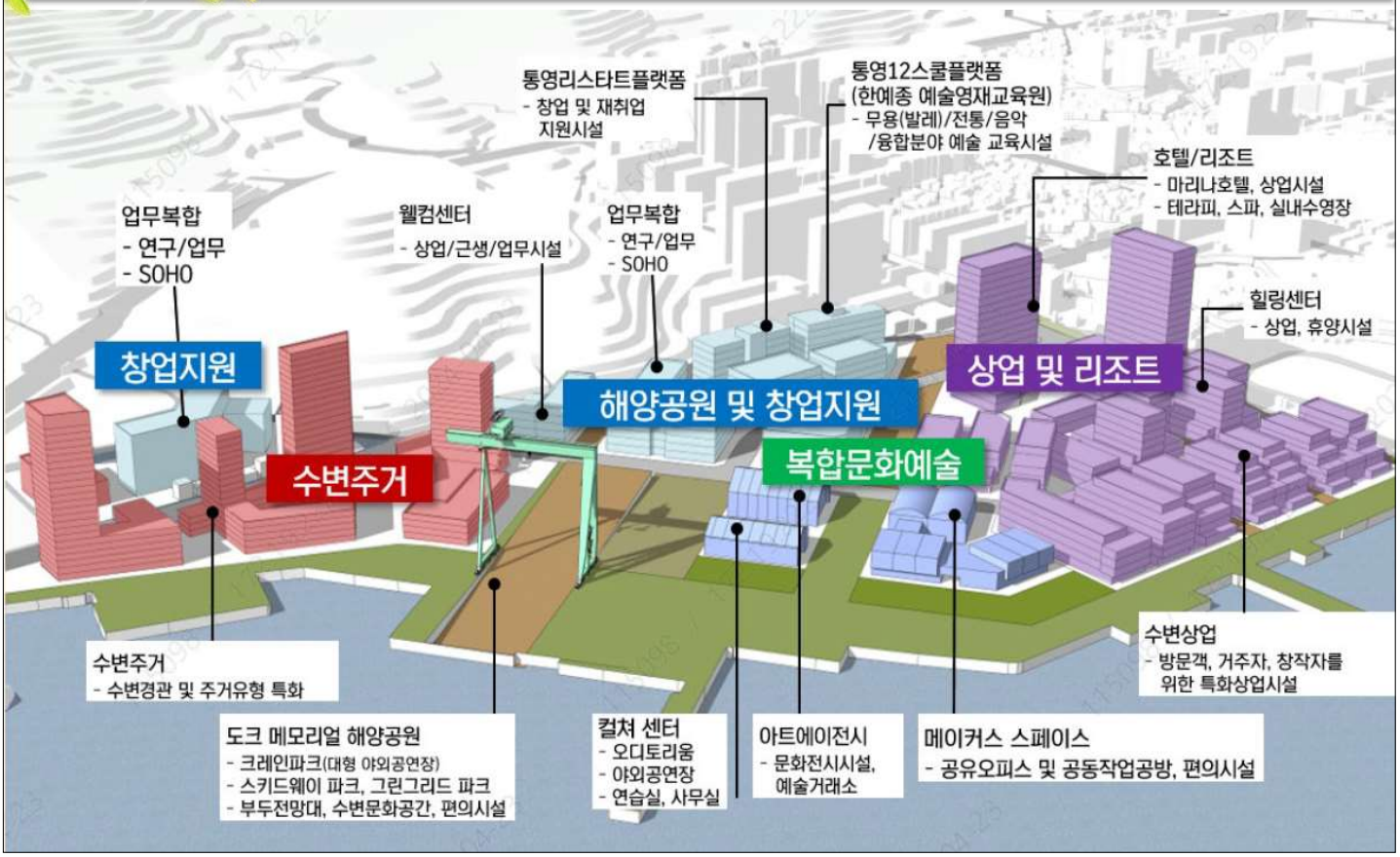
주요 변경	변경 사유
① 공간재편	기존 조선소 시설 철거 등에 따른 주거, 관광 용지 위치변경
② 개발밀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저밀→고밀 개발 변경
③ 지구경계	도로율 확보를 위한 남측도로 편입, 안벽 제척 등
④ 공원녹지	문화복합/산업복합용지 주차수요 확보를 위한 주차장 추가 반영
⑤ 도로망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순환형 도로망 구축

기존 시설물 활용방안 결정(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3.6.)

- **(1선대)** 경관광장으로 결정하여 존치·보존하고 공원과 연계하여 통영 바다 조망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
- **(골리앗크레인)** 문화공원의 랜드마크로서 야간조명, 하부 무대시설 등으로 활용
- **(도장장)** 오염도가 높아 시설 철거 후 산업복합 용지내 프레임 등 사용 가능 부분만 활용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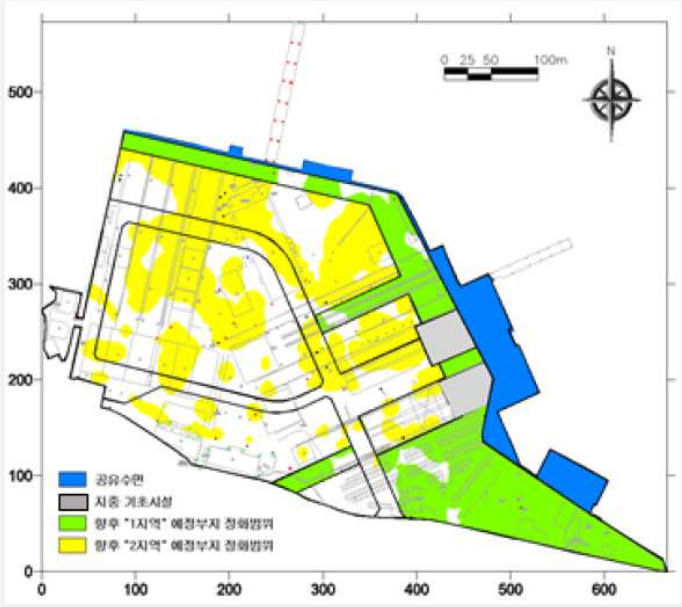
1선대 : 존치	골리앗크레인 : 존치	도장장 : 철거
바다 조망 · 휴식 시설 및 스탠드 형식 관람시설 활용	랜드마크 활용 (야간조명, 하부 무대시설 등)	철거 후 활용가능한 부분 사용
		

통영폐조선소 도시개발계획 수립안(2023)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 현황

▪ (현황) 용접, 도장 등 조선소 공정에 의해 지표면에서 최대 7m 깊이까지 중금속 및 유류 등으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토양오염정화용역 시행중임 (오염토량 분포면적 7.4만㎡, 사업지구 41%)

사업지구 오염 현황도	토양오염정화 개요
	▪ 폐조선소 부지 내 오염토양(중금속, 유류) 정화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예정 지목별 정화 (1지역) 공원, 학교, 주거지역 (2지역) 상업, 업무지역 (3지역) 공장, 도로, 주차장 등 ▪ (오염토량) 101천㎥ ▪ (오염물질) 중금속(카드뮴 등), 유류 ▪ (정화공법) 토양세척법 오염된 토양을 세척제와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토양 입자로부터 탈락시켜 액상으로 분리하는 방법 ▪(용역금액) 약 294억원 ▪(용역기간) '23.9. ~ '26.4.

기존 조선소 본관 및 별관동

기존 신아sb조선소 본관동 ➡ 통영리스타트플랫폼

-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번째 프로젝트(Rest+Art) < 2019.12.10. 개소 >
- 23개 창업LAB과 아트홀, 갤러리, 세미나실·미디어실 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문화·예술·관광, 취·창업 지원 및 지역문화 선도

대지면적	2,011 ㎡ (608py)
건축면적	1,024.24 ㎡ (309py)
연 면 적	5,022 ㎡ (1,519py)
시설규모	지상 6층
용 도	교육시설, 취창업지원
총사업비	148.3억원 (리모델링 등)

(국비 89, 도비 17.8, 시비 41.5)

✓ Restart: 재시작, 재출발
✓ Rest: 쉼, 휴식(관광·여행)
✓ Art: 문화·예술

통영리스타트플랫폼

통 영 리 스 타 트 플 랫 폼 층 별 구 성

층별안내
FLOOR INFORMATION

L6 옥상정원 브리핑룸 LH 현장사무소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

L5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영시 일자리지원센터

L4 창업 LAB #01 ~ #23 휴게실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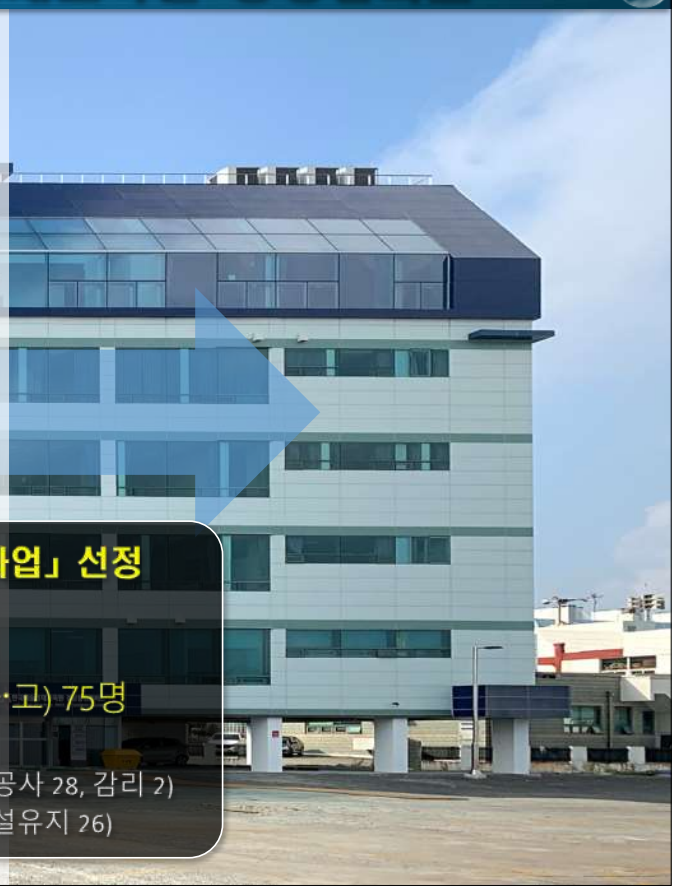
L3 세미나실 #01 ~ #05 미디어실
북라운지 (북피랑) 강사휴게실

L2 청년창업카페 운영사무실 및 직원 휴게실

L1 Lobby & Hall 아트홀 통 갤러리 영
지역창업커뮤니티센터 (판매형점포 2개소)

기존 신아sb조선소 별관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통영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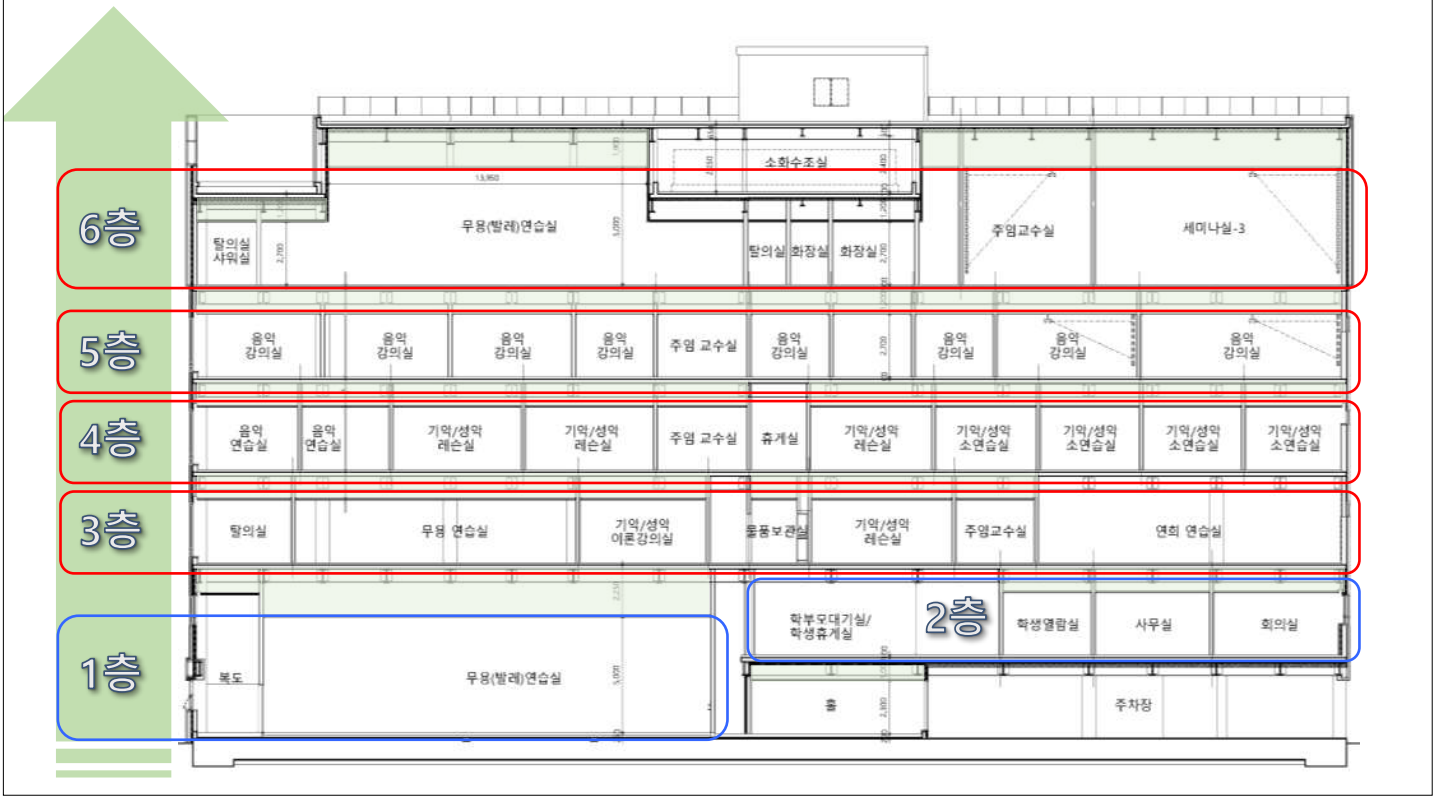
대지면적	1,830 ㎡
건축면적	711.14 ㎡
연 면 적	3,089.72 ㎡
시설규모	지상 6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총사업비	84억원 (리모델링 공사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선정

- ❖ 선 정 일 : 2020년 4월 28일
- ❖ 사업기간 : 2020 ~ 2024년(5년간)
- ❖ 교육대상 : 부산·울산·경상권내 예술영재(초·중·고) 75명
- ❖ 총사업비 : 195.1억원
  - · 도시재생사업 : 70.1억원 (보상 34.1, 실시설계 2, 철거 4, 공사 28, 감리 2)
  - · 예술영재사업 : 125억원 (공사 및 기자재 54, 운영 45, 시설유지 26)

기존 신아sb조선소 별관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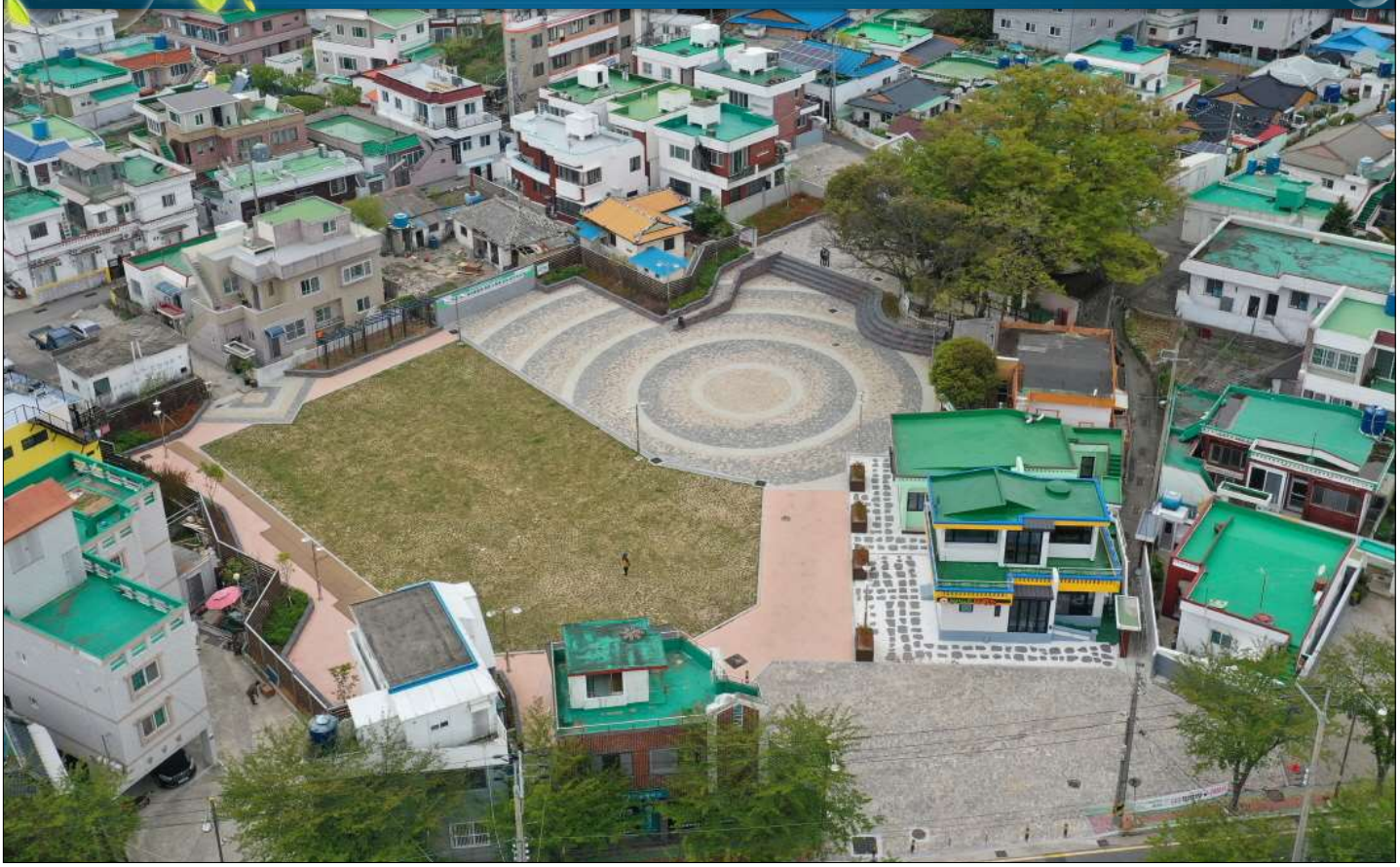
봉평지구 주거지 개선사업 ➡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

봉평지구 주거지 개선사업 ➡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위치 : 통영시 도남동 520번지 일원
- 면적 : 복합문화공간 조성 4,540㎡(약1,400평)
- 사업비 : 50.7억원(국비 30.4, 지방비 20.3)
- 사업기간 : 2019 ~ 2024년
- 사업내용 : 광장 및 이벤트무대, 로컬카페, 공유주방, 마을상점, 문화골목길 조성 등

봉평지구 주거지 개선사업 ➡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



결 론

-지역상생 및 공동체활동 확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위탁 우선순위는 주민에게 있음(활성화계획에 운영주체 설정)

사후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만 관리(지자체 재량권이 없으나 조정 가능)

주민참여가 이루어진 곳은 없는 곳 보다 높은 만족도 연구결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설립

향후 거점시설의 관리는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후 시민참여로 전환 필요

새뜰마을사업

취약지구생활여건개조사업의 목적은 최소한의 삶의 질 제공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목적.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경제활동은 핵심이 아님

주민 의견에 따라 사경조직 육성 필요

사후관리는 동일한 법제도로서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행정 간섭 최소화

간섭, 지원 그리고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

거버넌스, 관(官)-중(中)-민(民)

Public (I)	Promotive (H)	Professional (V)	Private (Z)
outcome	facilitate	pro	amateur
unsustainable	flexible	analytical	secret
unflexible	multiple	ability	community
unprofessional	negotiable	control	own
resultative	cooperative	performance	faction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제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만이 답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차이가 큽니다.
경영공시(수입과 지출 등 재무제표 공표), 배당금지, 공공성 확보!

거점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마을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하는 것을 하는 것!!
일을 할 생각이 우선이지 일할 사람과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초기사업비 지원금 5천만원에 현혹되지 말자!
지원이 들어오면 해야할 일도 늘어나고, 성과도 있어야 함! 목적이 가장 중요!

협동조합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서 같이 협동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
이사장 개인만의 정보와 결정이 아니며, 이 사업의 룰과 특성을 이해해야...
센터를 파악한 후,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행정과 함께 해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에 제언

사업을 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지역을 먼저 생각하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행정, 주민, 센터 모두가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
사업을 실행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도 해결방법!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행할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한지 파악 우선!
사업중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것과 좀 더 준비해야하는 것을 구분

주민에게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경우가...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그 문제를 해소하면 또 다음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운영주체가 더 중요!
공유재산법, 조례 등에 의해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에 제언

지역을 진심으로 대하는 전문가가 우선! 다음이 실력!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

여기서 해소되지 않는 문제라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는 발생!
지금 자리에서 힘들다고 회피하면 다른 자리에서도 힘든 일은 계속 마주함

갈등구조를 우선 이해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더 꼬일 수도...
갈등해소를 위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현안문제...
통하지 않는다고 놓아버리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칙과 기준이 중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전문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인내, 통찰력과 지역애!
일자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나의 미래와 역할을 고민

Ⅱ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사회 사회통합의 방안

시도지사협의회 전지훈 선임연구위원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정책현황 및 사회통합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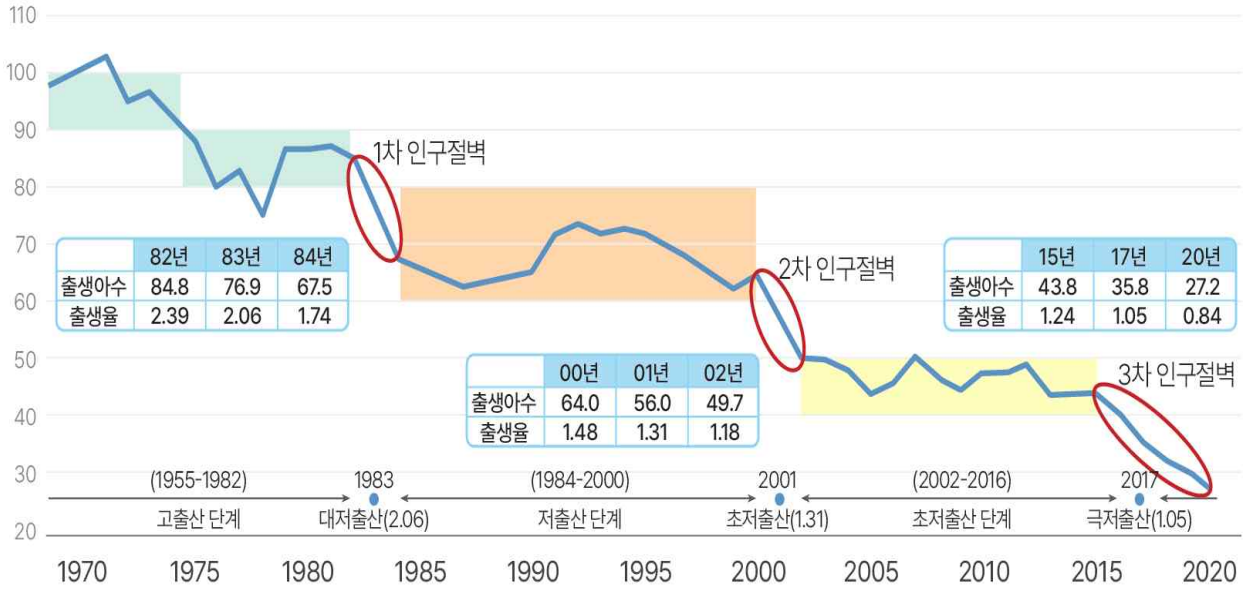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 산업현장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 주목

- 한국사회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인해 인구절벽 수준의 감소가 진행중이며 이미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

그림 1 국내 인구의 시기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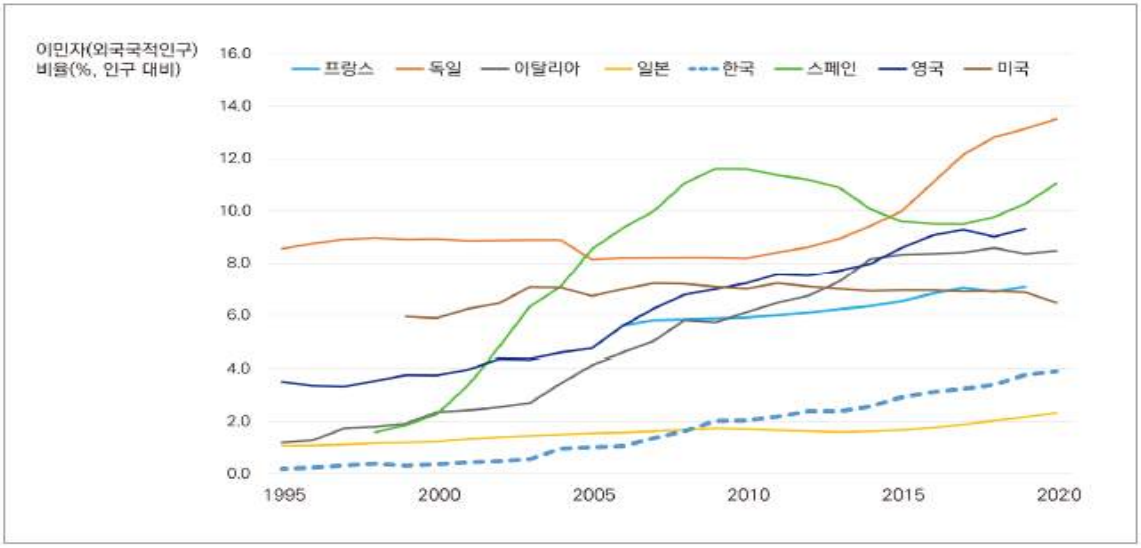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2024)

- 특히 저출생이 장기화되면서 생산인구를 중심으로 감소가 심각하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국가적인 인력난 심화가 대두되는 상황
- 이에 반해 국내 외국인 인구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유입이 확대되는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단순 산업 인력의 개념에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정주를 고려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

그림 2 OECD 주요국가의 이민자 비율 변화추이(1995-2020)

단위: %



자료: 김도원(2023)

○ 외국인의 현장수요는 지역별 특성 부합이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현장과 농어촌, 대학위기 극복 등 지역별 수요에 따른 외국인 인력 수요는 현장마다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수요 부합을 위해 현재 중앙중심의 비자와 제도설계 운영에 지역 관점에서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다양한 비자제도상 지역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시행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도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음
- 나아가 외국인 정책의 향후 방향은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
- 이처럼 시·도의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방향 전환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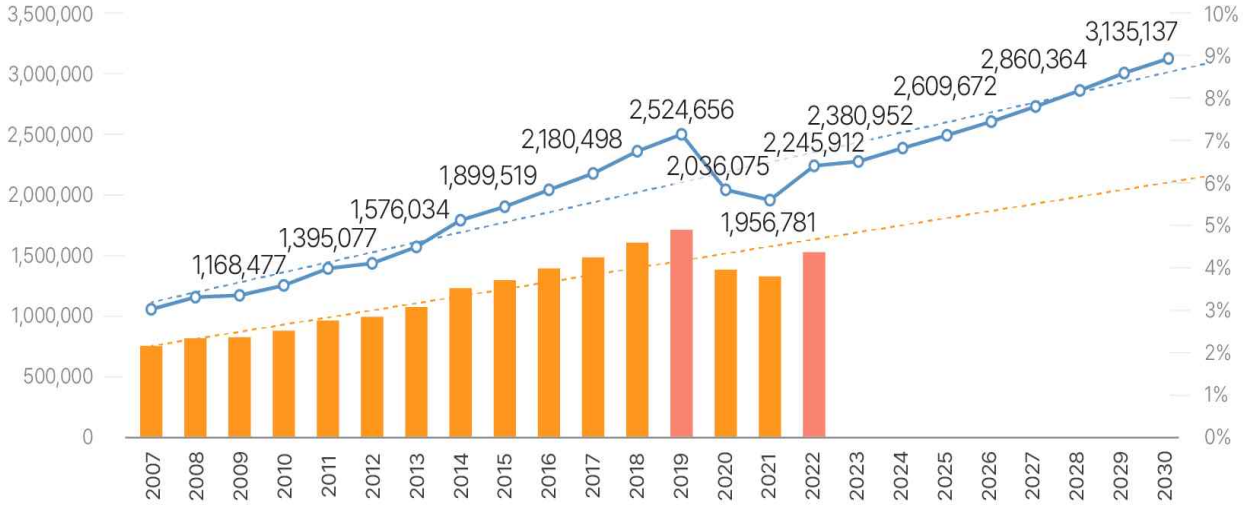
2. 외국인 관련 주요 현황

○ 국내 산업현장은 생산인구의 대안으로 외국인에 주목

- 산업현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산업 부족인원은 ‘23년 56.3만명까지 증가하여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인력수요가 부상
-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08년 116만명(인구대비 2.3%)에서 ’ 19

년 252만명 (인구대비 4.9%) 으로 급상승하며 '30년 300만명 초과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산업현장인력의 대체 효과로 주목하고 있음

그림 3 국내 외국인 수 변화 추이



자료: 법무부(2024)

○ 유형별 국내 외국인의 현황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2년말 기준 국내 외국인수는 226만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이며 전년대비 5.8%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특히 전년('21년) 대비 국내 유입 외국인 유형중에서 유학생수(20.9%↑) 증가율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 규모는 외국인근로자(17.9%)와 외국국적동포(17.6%) 비율이 높아 현재 국내 외국인 규모는 산업인력 중심의 근로자가 핵심주체임

표 1 유형별 국내 외국인 인구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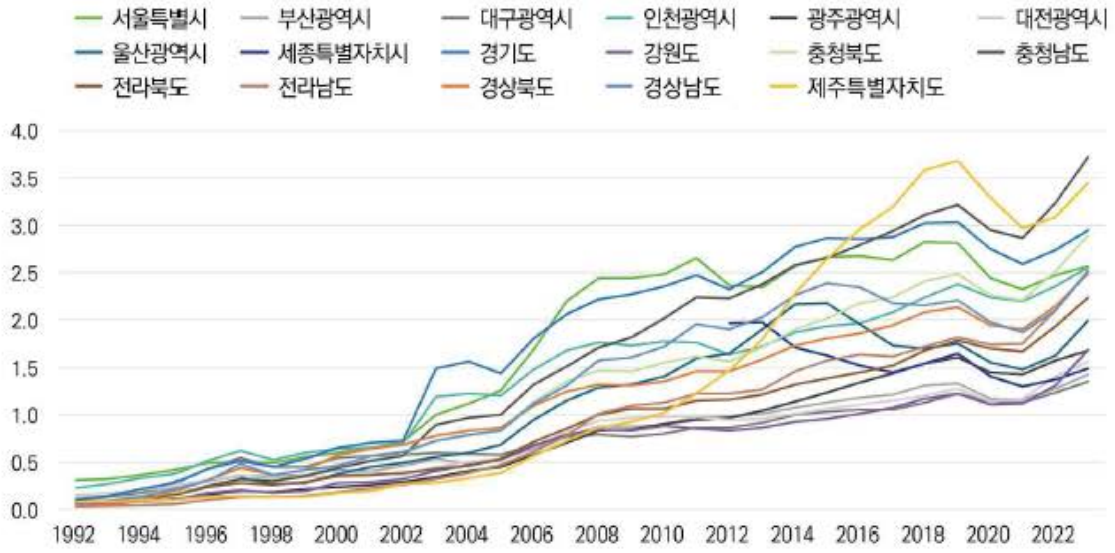
구분	합계	유형별 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 포	기 타 외국인		
'22년	**2,258,248**	1,752,346	403,139	175,756	189,397	397,581	586,473	223,825	282,077
	전체외국인 대비구성비	77.6%	17.9%	7.8%	8.4%	17.6%	26.0%	9.9%	12.5%
'21년	2,134,569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전체외국인 대비구성비	77.3%	18.5%	8.2%	7.3%	17.3%	26.0%	9.9%	12.8%
증감	123,679	102,379	7,964	1,124	32,790	29,000	31,501	12,945	8,355
	5.8%	6.2%	2.0%	0.6%	20.9%	7.9%	5.7%	6.1%	3.1%

자료: 행정안전부(2023)

○ 지역별 국내 외국인의 현황

- 지역별 등록외국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인구는 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몰려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음
- 하지만 이를 인구비율로 살펴보면 외국인 인구 비율은 비수도권 시·도지역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충남은 전체인구의 3.7%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하영(2023)은 지역별 분석을 통해 외국인 인구비율 변화가 큰 지역은 외국인 인구유입이나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관심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음을 제시함

그림 4 등록외국인 비율의 변화 추이(1991~2023)



자료: 조하영(2023)

3. 국내 외국인 관리 제도 현황과 한계

○ 외국인 근로자 체류를 위한 비자제도

- 국내 이민정책에서 비자를 통한 체류자격은 A부터 H까지 8개 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38개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히 특수비자를 제외하고 유학 등 장기체류비자는 D계열이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C, E, H 비자임

표 2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의 현황

계열	세부자격 구분				
A	A-1(외교)	A-2(공무)	A-3(협정)		
B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	C-1(일시취재)	C-2(단기상용)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G	G-1(기타)				
H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자료: 유희연(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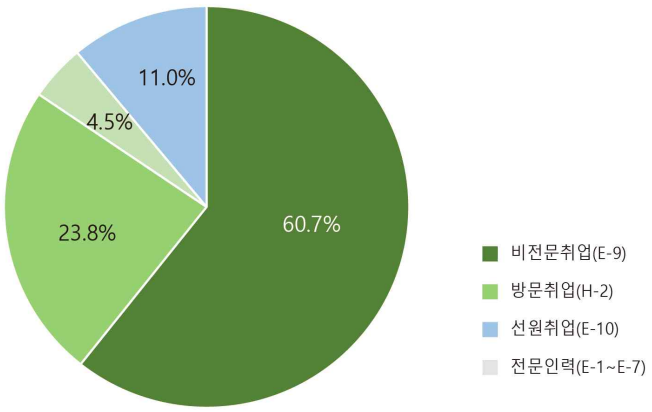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국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위한 다양한 체류자격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비자는 다음 4가지로 거론되고 있음

표 3 외국인 근로자 체류 주요 비자

비자	내용	비고
비전문취업비자(E-9)	5개 허용업종에서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	이후 숙련기능인력비자 전환 가능
방문취업비자(H-2)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 대상 단순노무분야 근무비자(3년)	
전문인력비자(E-7)	87개 직종에서 직능수준 높은 해외인력 발급	이후 거주비자 전환 가능
숙련기능인력(장기체류비자: E-7-4)	전문인력중에서 숙련기능인력 대상 비자이며 가족초청 및 장기체류 가능	

- 비전문 및 방문취업비자는 해당 업종에서 근무한 이후 국내에서 숙련 및 전문비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후 거주비자로 전환하여 영주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임
- 따라서 현재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아래 그림처럼 비전문 및 방문취업 등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 기본적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하여 중·소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내국인 고용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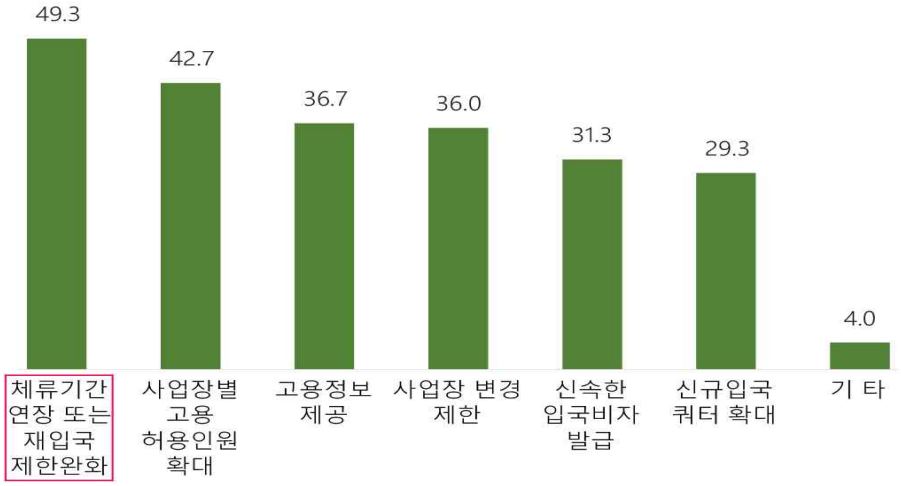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

-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외국인들의 잦은 사업장 이동 및 짧은 체류 허용기간 등의 문제해결 위해 체류기간 연장이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한국무역협회, 2023)

그림 6 외국인 고용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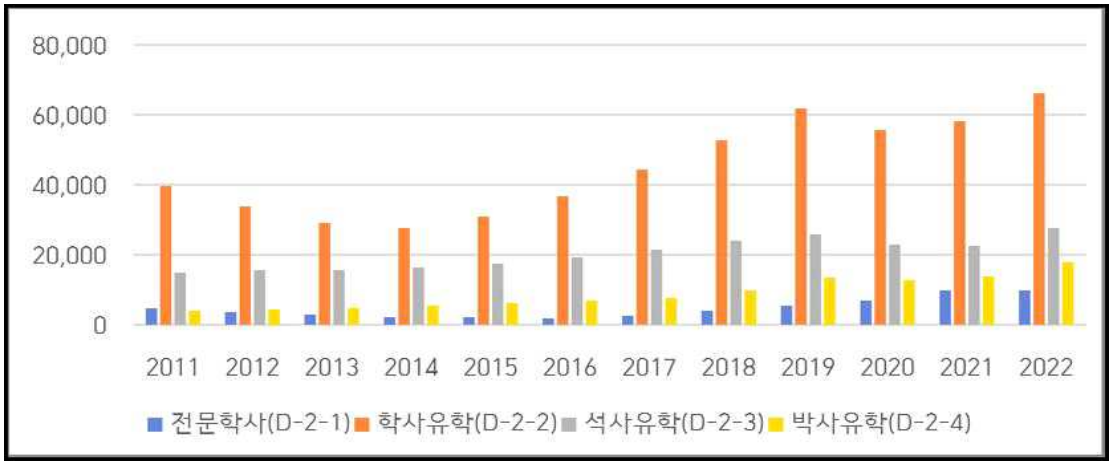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

- 외국인 고용형태로 전국에서 활용중인 세부 고용형태로는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통해 농협에서 농가가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관리하여 필요한 단기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근로자 정주환경 조성과 인원확대 등 개선 요구가 있음
- 이외에도 각 시·도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현재 비자 및 고용허가에 대한 다음의 어려움이 있음

○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비자제도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03년 12,314명에서 '22년 166,892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석·박사 과정의 고급인재 유입 증가가 뚜렷함
- 학사졸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통해 산업인력 구성원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고급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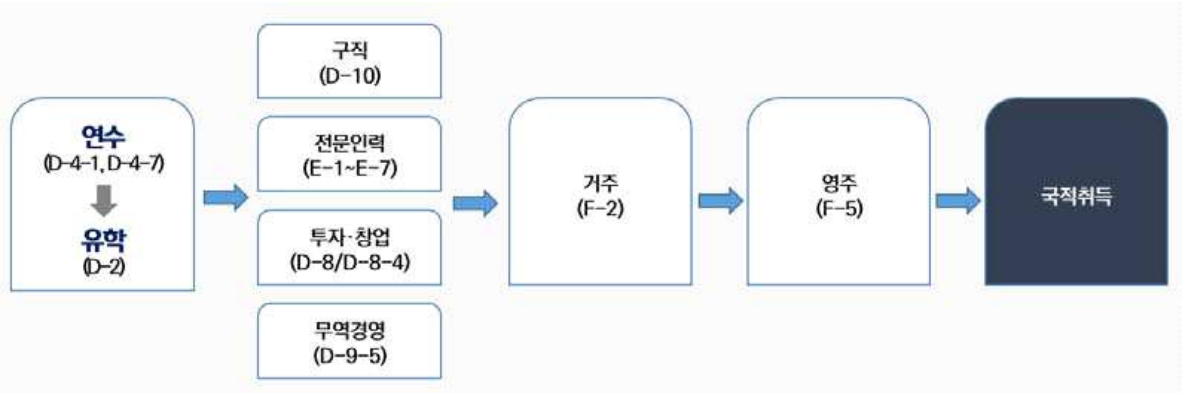
그림 7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외과정별 현황



자료: 이민정책연구원(2023)

-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에 따른 체류자격 변화를 살펴보면 연수와 유학과정을 통해 구직활동으로 연계되어 거주와 영주로 전환되는 형태임

그림 8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의 변화



자료: 이민정책연구원(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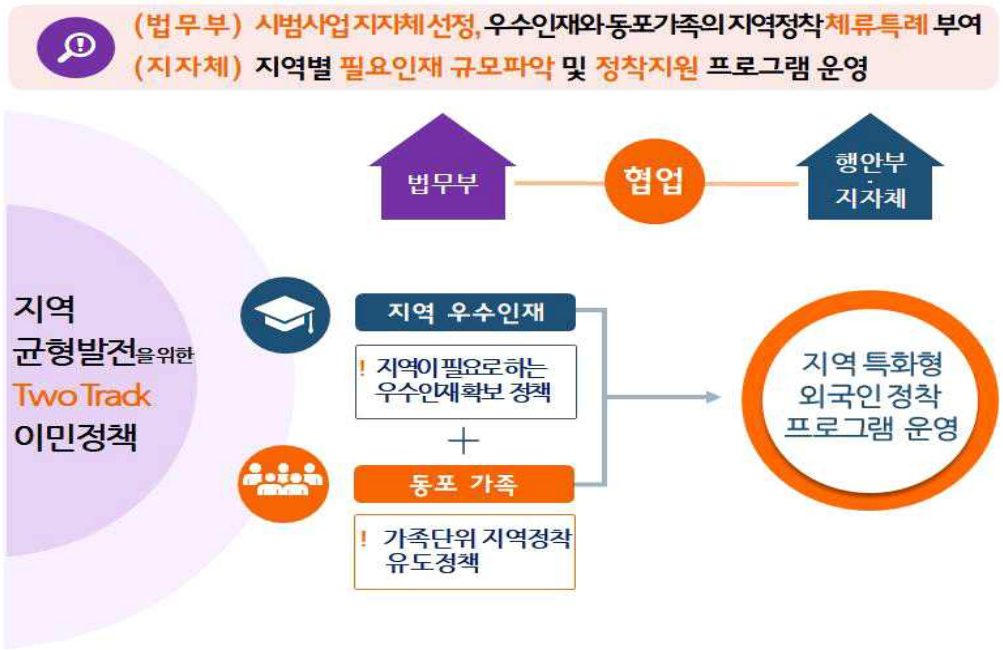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지역 전문인력 전환이나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통해 우수인재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 비자(F-2)로 발급 제도가 있음

- 하지만 유학생은 전문인력비자 전환이 업종한계 및 임금부담으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0.4%에 불과하며 비전문인력 취업도 불가한 한계가 있음
- 각 시·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지원제도에 대한 다음의 어려움이 있음

○ 최근 시행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현황

- 법무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동포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사업을 '22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9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개념도



- 본 비자는 인구소멸 기초지자체 89개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비자제도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며 그중 28개('23년)에서 66개('24년)로 확대실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❶ **목적:** 인구감소지역(89곳)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유도로 지자체의 생활인구확대, 경제활동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실현

❷ **대상:** 외국유학생, 동포 등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 조건(2년 거주의무) ⇒거주 비자(F-2, F-4) 발급

❸ **요건:**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 이상(약 3천만원), 한국어 3급이상, 신청일 기준 지역내 취·창업 확정, 최초 허가 근무처에 1년이상 근무

- 본 비자는 지역수요에 부합하여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타 비자에 비해 지역·개인의 발급자격 기준이 높고 우수인재와 동포가족만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나아가 지역중에서 공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지역의 자율성이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 논의

- 이러한 지역 맞춤형 비자 논의에서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유입과 정착의 맞춤형 정책지원과 지역수요 부합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비자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난 21대 국회에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을 위한 광역사증 신설」 법안이 제출(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2.12.19.)되었으나 현재 기한만료 폐기
- 본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 외국인에 대한 광역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전국의 여러 시·도에서도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특정분야 및 정책영역의 비자도입의 설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4. 국내 외국인 정책거버넌스와 해외사례

1) 정부의 외국인정책 거버넌스 현황

○ 정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추진

- 본 계획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정책을 의미하며 외국인 및 이민분야 최상위 계획

구 분	내 용
비 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목표	(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실현 (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기반 구축

- 본 계획에서 중앙주도 이민정책은 지역의 차별화된 수요반영의 한계극복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강화와 지자체 단위 전담기구를 제안

○ 외국인 관련 위원회 현황

- 현재 외국인정책 관련 정부위원회*는 5개로 구분되어 현재 운영중

* 외국인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 문화다양성위, 재외동포정책위

- 현재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외교부장관이고 위원들의 구성 또한 모두 관련부처 장·차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차원 참여가 미흡
- 향후 개정 예정인 외국인 정책 심의기구에도 시·도 및 지방 참여가 필요함

표 6 현재 정부의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외국인정책위원회】

- **법 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 원** : 15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국무총리 위촉) 등 30명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 **심의사항**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 주요사항 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 원** : 11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국무총리 위촉) 등 20명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 **심의사항**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조정·협력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법 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12개 부처 차관,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 **심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 업종·규모·송출국가·취업활동 연장
【문화다양성위원회】 ▸ **법 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문체부장관이 지명한 자 ▸ **위 원** : 9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문체부장관 위촉) 등 20명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 **심의사항**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보호·증진 등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법 령** : 재외동포기본법 ▸ **위원장** : 외교부장관 ▸ **위 원** : 10개 부처 차관, 국조실 차장, 민간위원(외교부장관 위촉) 등 25명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 **심의사항** :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 관련 조정·협력 등

2) 외국인 정책운영 해외사례

○ 캐나다 외국인 정책 운영사례

- 캐나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민권한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민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
- 영주권 발급도 이민자 유입 효과확산을 위해 ‘98년’ 주정부 지명 영주권(PNP) 발급‘을 시행하며, 매년 심의를 통해 주정부 수요를 반영한 연간 PNP쿼터를 통해 영주권을 배정・발급
- 이러한 제도시행 이후 이민자 체류지역이 캐나다 전지역으로 분산 효과

○ 호주 외국인 정책 운영사례

- 호주는 ’96년부터 이민자들의 저성장지역 정착 유인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주특화 지역 이민프로그램(SSRM)’을 도입・운영
- 이처럼 SSRM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이민담당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정책설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 지속

- SSRM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낙후경제지역에 고용주, 주정부 및 지방정부 후원을 통해 정착하여 3년동안 거주하며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

5. 시·도 외국인 정책의 수요

○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 수요

- 현재 정부의 외국인 정책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수요를 취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7 외국인에 대한 시·도의 정책건의 내용

	유형	시·도 건의 내용	관련부처
1	광역비자 도입	• 광역비자 도입, 지역특화 비자 개선 등을 위한 범부처 TF 운영 등	법무부, 교육부 등
2		• 광역비자 도입, 체류요건 완화, 우수인재 영주요건 완화 등	
3		• 광역비자 대상·쿼터 지정, 비자발급 등 권한 광역단체장에 부여	
4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임이자발의)」 신속 통과	법무부
5		• 광역형 산업비자 신설, 기업별 외국인력 한도 폐지 등	산업부 등
6	시도 권한확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시·도 이관	법무부 등
7		• 국무조정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협의회장 참여	국조실 등
8	정부부처신설	• 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이민부처' 신설	대통령실
9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	• 지자체 추천 쿼터 인구 10%까지 확대, 체류자격별 추천 권한 부여	법무부
10		• 비자 대상지역 확대 : 인구관심지역(18개 시·군) 추가지정	
11	유학생 제도개선	• 교육부에서 지정한 외국인 유학생 37개 제한대학 일괄해제	법무부, 교육부 등
12		• 유학생 과정별(학부, 대학원), 국적별 등 분리평가, 심사기준 정비 등	
13	근로자 제도개선	• 성실 외국인 근로자(E-9) 대상 재입국 허가승인 절차 간소화	법무부
14		• 산업인력(E-9) 송출국 지정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장에 부여	산업부 등
15		• LH 임대주택 외국인력 제공, 주거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국토부 등
16		• 항만배후단지 일반창고업 관련 비전문취업(E-9) 등 고용허가 추가	해수부 등
17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5→10개월	법무부
18		• 공공형 계절근로 대상지역 확대 : 19개소 → 전체 시·군	농림부

- 전국의 시·도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단계에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비자제도 개선의 요구가 많으며 이는 지역이 설계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으로 수렴되고 있음
-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 및 이민정책의 통합화와 함께 및 관련 정부위원회 활동에 시·도 참여 및 권한 확대를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현재 입국전 및 입국후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재 제도의 시도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6. 외국인 유입을 위한 사회통합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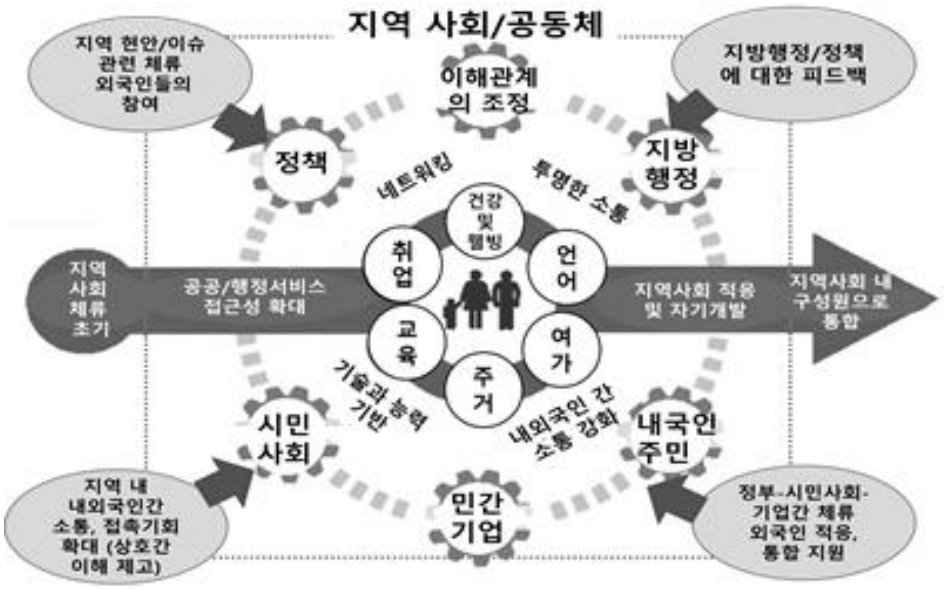
○ 외국인 사회통합의 의의

-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는 과거 정부의 외국인 이민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외국인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시작을 의미함
- 이는 단순한 고용문제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체류-처우-통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민정책 및 행정 시스템의 구현을 의미함
- 궁극적으로 이민정책의 최종목표인 체류 외국인의 지역 사회 내 내실있는 통합을 위해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과정

○ 외국인의 지역사회 갈등해소와 통합 방향

-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과정은 지역사회 유입부터, 정착, 사회적응, 내국인 주민과 소통, 자립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프로세스
- 이러한 사회통합의 구현을 위해 지자체는 통합과정의 촉진자, 지원자, 정보제공자, 조정자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지역주민, 외국인 정책의 투입요인들과 맥락들이 외국인의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 과정 설계가 핵심(정동재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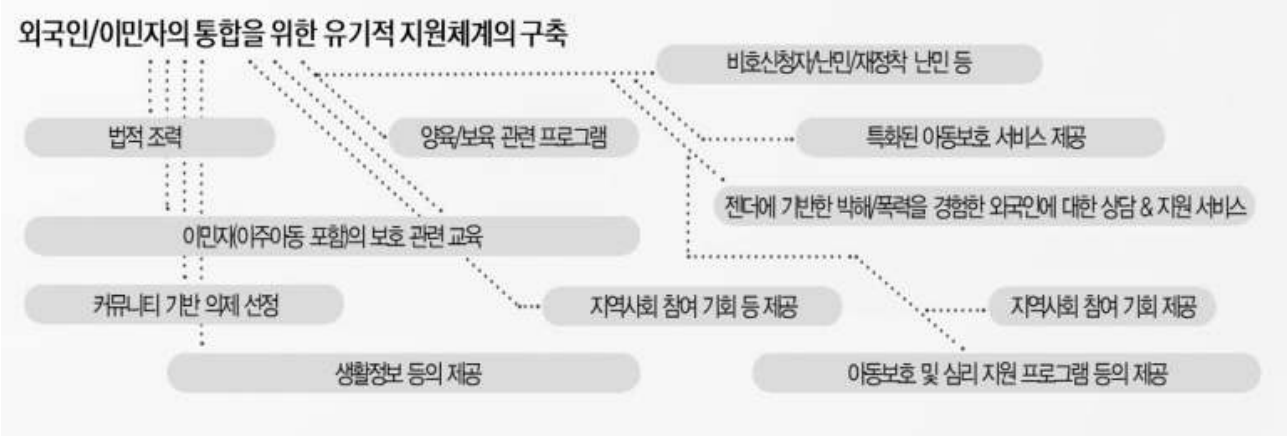
그림 10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과정



- 외국인의 지원은 다양한 영역(취업, 언어지원, 여가, 주거, 교육, 건강)에서 동시에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조정이 요구됨
-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들이 자립하게 될 수 있을 때에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일원으로 기능이 가능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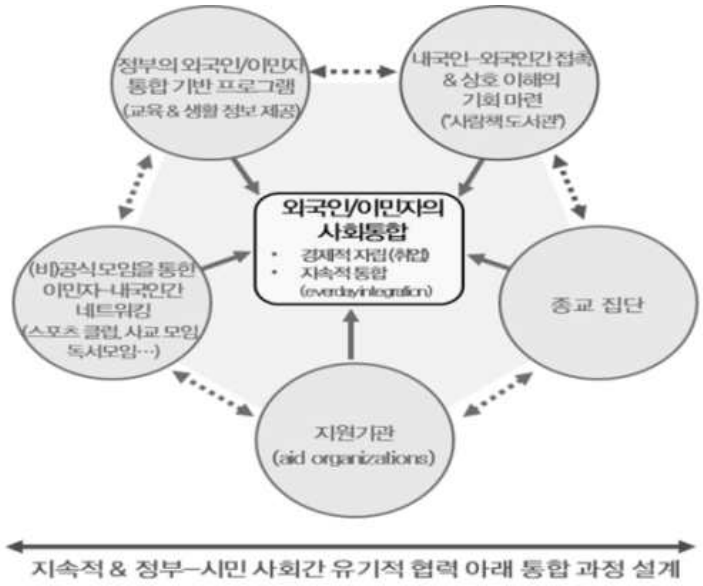
○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의 전략

- 체류 외국인의 내실있는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통합정책의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자원들의 유기적 지원체계가 핵심임
-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는 단계별 프로세스 추진의 전략이 효과적이며 우선 1단계로 외국인의 일정수준 경제적 자립요건의 마련과 생활의 안정, 2단계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혀의 사회통합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통합적 사회통합의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기관, 시민사회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 지원정책은 특정분야에서 나아가 다양한 정책영역(언어, 법적조력, 지역사회참여, 보육, 생활정보 제공 등)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정동재 외, 2022)



- 또한 지역사회 외국인 사회통합은 상시적, 지속적 추진되어야 하며 외국인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제공이 바람직

그림 12 외국인의 상시적인 사회통합과정



- 이러한 사회통합 과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공동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주민 등과 지속적인 피드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이러한 프로세스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민자의 사회통합과정을 주도하는 주체라기보다 정부-지자체-시민사회등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중심의 협업이 필수적임

참고문헌

김도원(2023).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주요국의 국제이주동향. 통계브리프.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법무부(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유희연(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국토연구원.

이창원(2023). 비전문취업(E-9)과 숙련기능인력(E-7-4) 현황 비교. 통계브리프. 이민정책연구원.

정동재 외(2022). 데니즌쉽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조하영(2023). 국내 이주민의 지역분포 변화와 정책적 함의. 통계브리프.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2023).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TRADE BRIEF.

Ⅲ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원광대학교 조성 교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2024. 6. 27.

CONTENTS

01 개요 3

02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추진 근거 8

03 안전사업지구 활용 12

04 지역안전 개선사업 사례 16

01 개 요

개요

높은 안전사고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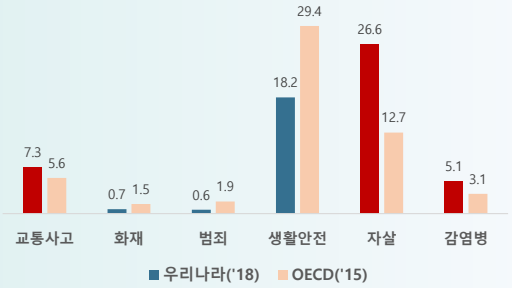
안전사고 사망자수 대응, 지역간 안전격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안전사고 사망자 16%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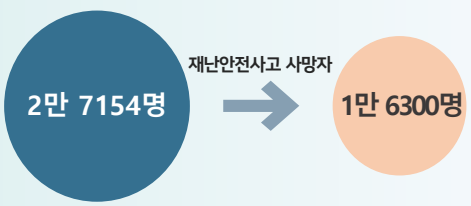
-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 지역안전지수 시행의 성과
- 그러나 여전히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 30% 해당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 추진

- 국내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 사망자는 OECD최하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통해 재난안전사망자수 감축 노력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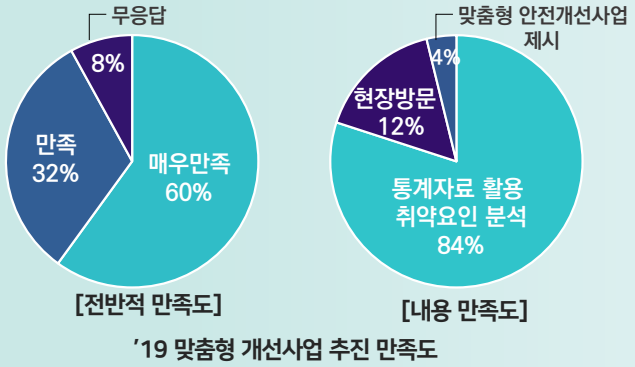


4

개요

지역안전수준 개선 방안의 다변화 모색

기존 지역안전 개선 사업의 성과 및 한계의 극복 노력



[전반적 만족도] [내용 만족도]

'19 맞춤형 개선사업 추진 만족도

- 증거기반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최적의 분석방법과 맞춤형 사업 연계함
- 일시적 안전개선 효과를 창출하나 사업종료 후 지속성 보장 어려움
- 지역중심 지속적, 안정적 지역안전개선 거버넌스 구축 및 실무 역량강화 기회 확보 제한적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

안전공동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자립적, 지속적 안전대응 역량 확보 필요
  - ✓ 현장중심 안전관리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 역량 강화 필요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복합 안전개선사업 추진
  - ✓ 협력체계 기반의 공간단위 안전개선 사업추진 진단→사업제시→마스터플랜→사업시행

한계

17개 시도 지역안전지수 담당부서 공무원 설문조사(2024. 5) 결과

기존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 인식

긍정적 측면

- 지수사업을 통한 전담부서 운영(68.8%) 및 전문성 향상(67.5%)에 기여
- 지수사업 시행 이후 주민의 참여 증가(25%),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확대(50.1%)
- 컨설팅이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81.3%) 하며, 사고 감소(81.4%) 및 예방 효과(75.1%)에 긍정적 영향
- 컨설팅으로 지수사업의 질적 수준향상(68.8%)에 기여

아쉬운 점

- 지수사업이 주민 만족도 향상(12.5%)으로 연결되지 못함
- 안전사업 관리역량 강화(25.1%), 인력확충(6.3%), 전문 인력확보(12.5%)예산 확충(18.8%) 및 예산확보 방식의 다변화(37.5%)측면 다소 부족
- 타분야 사업과 연계(56.3%), 사업유형은 다변화(37.5%) 하고 있으나 사업규모의 확대(12.5%)로는 이어지지 못함

→ 지수사업 지표의 맞춤식 개선 외, 지역여건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컨설팅 요구

→ 컨설팅 결과 도출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업운영관리 필요성 인식

효과

시도컨설팅 추진 보완 방안으로 사고 유형간 공통관리

안전수준 개선 사업 지원 확대

도시 활성화 사업의 안전콘텐츠 활용

공간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지역 종합관리 필요성 증가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분석으로 사고다발지역 유형화 후 개선사업 도출

지역 커뮤니티 연계 안전사업지구 활성화

7

02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추진 근거

계획

1. 지역 주도형 지역안전수준 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

지역 안전수준 분석

복수 유형에 대한 지역안전수준 분석

지역안전수준 분석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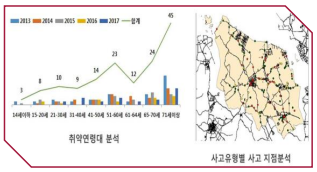
- 시도 안전여건, 관리특성 반영 위한 지역안전수준 진단
- 공간단위별 분석 통한 안전수준 개선사업 기초자료 구축

분석 매트릭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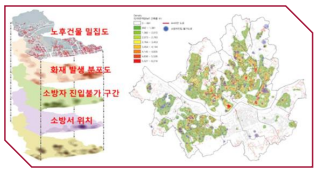
- 과학적 진단방법 및 사업 발굴의 착안사항 도출

사업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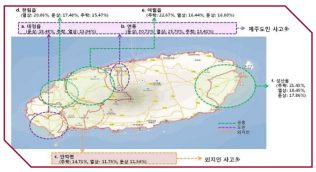
- 기존 사업사례 검토를 통해 유사 사업의 활용가능성 검토
- 분석과정, 사업수행과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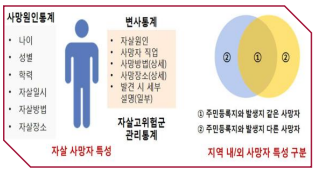
교통분야(전남)



화재분야(서울)



생활안전분야(제주)



자살분야(전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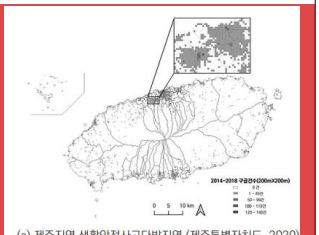
1. 지역 주도형 지역안전수준 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

지역 맞춤형 안전수준 분석

공간단위 관리가 필요한 재난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사업지구 적용지역 선정 사례

구분	피해사례	공간단위 관리 가능성	정책적 측면
기준	과거 10년동안 지대본 이상 설치되었던 재난 · 안전 유형	전문가 조사 결과	지역안전지수
유형	풍수해, 화재, 산불, 해양유도선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사업장 산재, 철도사고, 유해화학물질사고	풍수해, 화재, 범죄, 교통사고, 산사태, 산불, 유해화학물질 사고, 인파사고, 방사능재난, 지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a)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다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2020)

(b) 제주지역 범죄위험지역 분포 (제주연구원, 2021)

- 사고 중복 및 다발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건·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점에 착안하여 제주안전사업지구 지정
- 시도별 공간단위 관리가 필요한 유형과 지역 선정 방법 적용
  - ✓ 지역안전지수 결과 검토(최근 3년, 시군별)
  - ✓ 지역별 이슈 분석: 언론기사 분석
  - ✓ 공간분석
  - ✓ AHP 분석

계획

1. 지역 주도형 지역안전수준 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

진단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수준 개선사업 도출

진단보고서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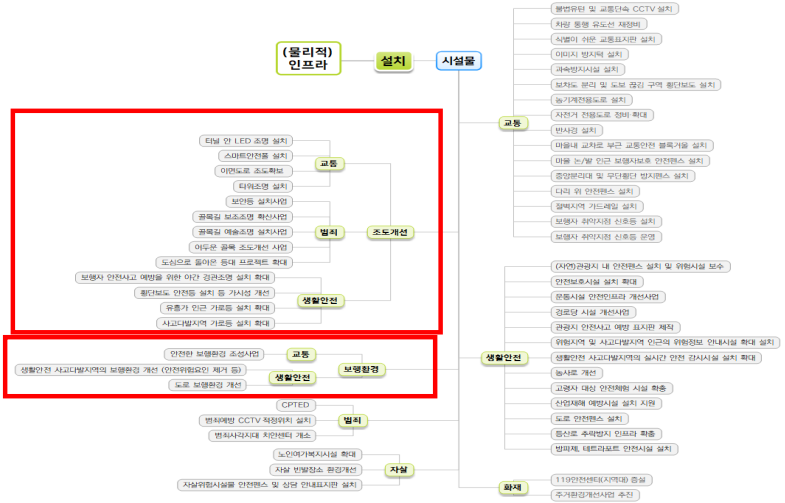
-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회의
- 여건파악–분석결과 공유–담당자 면담 및 조사–현장방문–개선과제 도출

지역맞춤형 안전수준 개선사업

- 안전수준 개선 사업 도출 및 각 주체별 역할과 개선대책 추진 방향 제안
- 제도, 인프라, 문화로 구분

공간단위 다수 유형 위험 지역 개선방안

- 복합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중심 시설개선 방안
- 안전사업지구 지정 연계 활용방안 도출



18

03 안전사업지구 활용

사업

1.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안전사업지구 개요

안전사업지구 근거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2) 및 시행령(제73조의10, 11) 검토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지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지자체장이 제출한 안전사업지구 사업계획 및 관련자료를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지역주민의 참여정도,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안전사업 후 안전수준 향상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안전사업지구를 지정
- **(지정절차)** 기초지자체 장은 안전사업지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추진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 행안부장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관보에 공고
- **(지원 및 평가)** 행안부장관은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안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조정할 수 있으며, 지구지정을 통해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연도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함

사업

1.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지구지정 관련 사업

방화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정의 및 목적: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하나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지정기준:**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산림청의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산불취약지역에 인접하여 산불 확산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정의 및 목적:**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시·도지사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지정기준:**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7개 유형**(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

친수구역(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정의 및 목적:**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 비율(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 **지정권자:**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기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

사업

1.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지역사회 참여 안전개선 사업 경과

안전도시 시범사업

- '09, 행정안전부 특교세
- '안전·안심·안정'의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13~'14, 행정안전부 특교세
-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1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07, 건설교통부 (현 국토교통부)
- 도시공간의 질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 중 도시에 대하여 추진한 시범사업
- 기능중심분류 모델사업

방재마을 시범사업

- '08~'14, 소방방재청 (현 소방청)
-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요인 분석통한 특화사업 시행, 민관협의체 구성 통한 사전재해 예방 목적
- '14,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통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14~, 법무부
-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주민불안을 감소시켜 국민안전에 기여함을 목적

20

04 지역안전 개선사업 사례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① 불법주정차 및 과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② 안전펜스 설치 및 정비 ③ 도로열선 설치 ④ 옐로우카펫 설치 ⑤ 바닥형 신호등 설치 ⑥ 안심 승하차존 구축 ⑦ 노란 횡단보도 ⑧ 노란 신호등 설치 ⑨ 노란 발자국 설치 ⑩ 스마트스쿨존 구축 ⑪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⑫ 스마트폴 설치

불법주정차 및 과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출처: 대전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충청뉴스, '20.08.06.)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14개소 설치 완료('22)
  (제천시)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위반시 일반구역 과태료의 2배 부과('20)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 「도로교통법」 제12조4항 신설 설치 의무화 '20년 시행

안전펜스 설치 및 정비

출처: 보행환경개선기대 용인신봉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 (중부일보, '22.06.27.)

- 무단횡단이 잦은 구역에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
  (용인시) 대지초 안전펜스 교체 및 정비('22)
  (송파구) 삼전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23)
  (동해시) 동해해솔학교 등 4개 학교 안전펜스 설치('23)
  (광진구) 용곡초, 동자초 등 9개교 통학로 중심으로 안전펜스 설치('23)

※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부산시 연제구의 경우, 연제거제초~레이카운티 400m 상가 50여 곳 강성 반대 민원(상하차, 영업 어려움)에 안전펜스 설치사업 난항('23)
※ 과도한 설치는 오히려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을 조장할 우려 있음

도로열선 설치

출처: 이천시 교통안전사고 대비 진흥령 도로 열선 설치 안심출근길 등굣길 구축 (기호일보, '21.12.22.)

- 도로 아래에 매설된 열선이 겨울철 강설시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천시) 겨울철 교통사고 대비 도로 열선 설치 안심 등굣길 구축('22)

옐로우 카펫 설치

출처: 네이버지도(never.com)

-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 안전설치물
  (강동구) 옐로우카펫 18개소 추가 설치, 현재 총 71곳 설치 운영 중('23)
  (진주시) 촉석초등학교 주변 옐로우카펫 설치('21)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 네거리에 옐로우카펫 설치('21)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① 불법주정차 및 과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② 안전펜스 설치 및 정비 ③ 도로열선 설치 ④ 옐로우카펫 설치 ⑤ 바닥형 신호등 설치 ⑥ 안심 승하차존 구축 ⑦ 노란 횡단보도 ⑧ 노란 신호등 설치 ⑨ 노란 발자국 설치 ⑩ 스마트스쿨존 구축 ⑪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⑫ 스마트폴 설치

바닥형 신호등 설치

출처: 동작구 전체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 (국제뉴스, '23.11.20)

-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스마트 횡단보도 등) 야간에는 불빛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신호등 신호를 멀리서부터 인지 가능,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보행자들에게도 도움이 됨
  (동작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총 37개소 설치('23)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39개소 신규 설치('23)

안심 승하차존 구축

출처: 오산시, 고현초 앞 안심승하차 존 조성 (신아일보, '23.10.09.)

- 통학차량에 한해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도로표지 등을 통해 특정 구역을 설정
  (전북)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조성('23.)
  (오산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6대가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존 조성, 통학차량에 한해 정차허용시간은 5분이내, 등교시간(오전8시~9시), 하교시간(정오~오후4시) 일시적으로 정차가능('23)
  (세종) 안심승하차존을 학교신설시 설계단계부터 반영('22)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근거하여 안심승하차존 조성 가능

노란 횡단보도 설치

출처: 광진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랑횡단보도 방울울타리 설치 (신아일보, '23.11.30)

-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고 주의 의미를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
  (광진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7개소 설치('23.4) → 81개소 설치 완료('23.11.)('23)
  (대구) 160개 설치 완료('22) → 2,343개 설치 예정(~'2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설치 의무화 '23.7시행

노란 신호등 설치

출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 설치제안 (경남일보, '21.05.04.)

- 테두리와 지주를 노란색으로 바꾼 신호등 설치
  (강남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노란 신호등 설치('16)
  (안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전면교체('21)
  (세종) 어린이보호구역 5곳 노란신호등 설치('22)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전체 설치 및 교체('20~'22)

교통

고령자 보행환경 조성사업

①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②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③ 바닥형 신호등 설치 ④ 횡단보도·정류장 간이의자(보행쉼터) 설치 ⑤ 보행·교통섬 설치 ⑥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⑦ 교통정온화 ⑧ 야간 조명타워 설치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출처: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 (보안뉴스, '21.04.20)

-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 · 금지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주의를 유도하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 등을 통한 보행로 개선
  - (부평구) 노인보호구역 10곳(방죽공원, 외골놀이공원, 부광노인대학 등) 신규지정, 23년 현재 49곳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 관리 중('23)
  - (서울) 전통시장(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등) 주변도로를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 노인보호구역 표지 및 안전펜스 설치('21)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출처: 횡단보도 신호시간 늘렸더니 노인보행자 사고 예방에 효과 (연합뉴스, '20.07.08.)

- 보행속도가 저하되어 주어진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연장
  - (광주) 요양기관 인근 교차로 11곳을 대상으로 보행신호시간 연장(보행자 기준속도 초당 1m→0.7m 하향 조정)('23)
  - (제주) 병원인근 교차로 8개 지점 보행신호 개선(횡단보도 보행시간 최대 7초 연장)('23)
  - (충주) 노인보행수요가 많은 곳(법원 앞~대가미 공원)을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설치*('22)

※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영상으로 검지하는 장치를 적용해 주어진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를 영상검지 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

바닥형 신호등 설치

출처: 건널목이 두려운 노인들, 바닥신호등보행섬 설치 (JTBC, '20.12.17.)

-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스마트 횡단보도 등) 야간에는 불빛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신호등 신호를 멀리서부터 인지 가능
  - (서산시) 유동인구 많은 호수공원사거리 등 5곳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바닥신호등 설치('23)
  - (태백시) 협심아파트 등 4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23)

횡단보도 · 정류장 간이의자(보행쉼터) 설치

출처: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2.) p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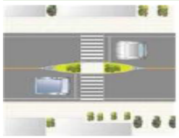
- 보행주기가 긴 횡단보도나 정류장에서 대기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하여 사고예방
  - (대구)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 하단에 의자 41개와 옥외용 벤치 12개 설치('21)

교통

고령자 보행환경 조성사업

①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②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③ 바닥형 신호등 설치 ④ 횡단보도·정류장 간이의자(보행쉼터) 설치 ⑤ 보행·교통섬 설치 ⑥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⑦ 교통정온화 ⑧ 야간 조명타워 설치

보행 · 교통섬 설치



출처: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교통섬 설치매뉴얼 개발(부록) (교통안전공단, '17.12.)pp. 3

-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가 너무 길거나 복잡할 때 잠시 대기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시설물
  - (포항시) 교통혼잡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육거리에 교통섬 설치('23.8)

※ 단,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함. 보행섬이 환경에 따라 보행로 단절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운전자 사각지대로 작용할 우려 있음
예) (광진구) 좁은 횡단보도와 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안전사고 우려로 자양사거리 교통섬 철거('23)

횡단보도 표지병 설치

출처: 횡단보도 밤에도 보인다. 충북 증평 음성표지병' 설치 (한겨레, '24.03.08.)

- 가장자리에 심는 병모양의 등으로, 밤 시간대나 주 · 야간 악천후에도 횡단보도 식별이 가능해 사고 예방에 효과적
  - (음성 · 증평군) 음성 · 증평지역 주요 도로 32곳의 횡단보도 80곳에 표지병을 설치 예정('24)
  - (안성시) 구도심의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로 중앙차선, 회전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하이브리드 도로표지병(낮 시간대에 태양광 충전, 야간에 자동점등)을 설치('23)

교통정온화

출처: 전주 마중길, 안심도로 '대상' (브레이크뉴스, '21.07.06.)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전주시) 전주역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거리의 직선도로를 통행차량의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S자형 곡선도로로 조성('21)

야간 조명타워 설치

출처: 대전시, 교통사고 예방 위해 야간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TJB아침뉴스, '19.05.23.)

-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조명타워를 설치하여 운전자, 보행자의 사물인지도와 식별력 향상에 도움
  - (대전) 야간조명타워 설치 후 교차로 밝기가 8배 이상 향상, 교통사고건수 평균 25~30% 감소('19)
  - (원주시) 통행량이 많은 21개 교차로에 조명타워 설치('22)
  - (양천구) 간선도로 교차로 7곳에 24m 높이의 조명타워 설치('24)

화재

주거시설 단독주택 화재 예방 사업

① 화목보일러 예방 수칙 홍보 및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② 태양광 설치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점검 ③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④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

(부주의) 화목보일러 예방 수칙 홍보 및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출처: 공주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충청일보, '24.02.06)

-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인 만큼 사용자의 자율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
  - (울산 동구) 서부동 '새남마을'과 방어동 '성골마을' 가구 중 화목보일러 취급 주택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지원('24)
  - (청양군) 화목보일러 화재 증가에 따라 10개 읍면 전광판과 인쇄물* 을 통한 홍보활동('24)

※ 인쇄물에 담긴 안전 수칙: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인근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등

(전기적) 태양광 설치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점검

출처: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 10년 중 7건은 "전기적 요인" (한국에너지, '23.10.07.)

-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 세부 원인으로는 미확인 단락,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트래킹에 의한 단락 등 전선의 불량과 노후가 주를 이룸
  - (경남 고성군) 단독주택내 태양광접속반 부분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 관계자가 소화기 사용해 초기 화재진압 성공('20)
  - (과산군)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화재를 집주인이 집안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활용해 자체 진화('24)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출처: 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참여 홍보 (중도일보, '24.02.06)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단독 · 다중 · 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 · 다세대), 소화기는 세대 ·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함
  - (나주시) 설명절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24)
  - (양산시)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적으로 홍보('24)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

출처: 구로소방서, 취약계층 위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소방방재신문, '24.01.17.)

-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을 운영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점검을 진행,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낮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주택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구로구) 고령의 독거 주민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선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으로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24)
  - (마포구) 화재 취약 계층 위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24)
  - (송파구) 소외이웃 위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24)

범죄

집객시설 범죄예방 사업

합동순찰 실시

출처: 대전대덕경찰서, 문지마 범죄 예방 위해 유흥가 집중 순찰(중남일보, '23.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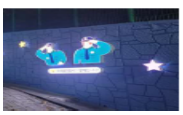
- 경찰이 관계기관과 자율방범대, 시민 경찰 등 지역주민(순찰신문고 탄력순찰 신고)과 힘을 모아 순찰 강화, 우범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도보 순찰 강화)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 (대덕구) 중리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대덕경찰서장, 중리동 제 1 · 2 자율방범대, 대덕구청 직원 등 지자체 지역주민 40여 명이 합동 순찰('23)
  - (안산시) 선부파출소 경찰관과 선부1지대 자율방범대원들은 야간시간대 동명상가와 선부역 광장 주변순찰('24)
  - (계양구) 계산동 문화의 거리와 복개천 등 유흥가 주변에서 민 · 경 합동 위력순찰 실시('17)

범죄예방팀 신설 및 운영

출처: 파주경찰서, 유흥가 · 빌라촌 안전 위한 범죄예방팀 신설 (연합뉴스, '21.02.22.)

- 112신고가 잦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빠른 대응과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범죄예방팀 신설
  - (파주시) 3인 1조 2개팀으로 편성돼 파주 야당역 인근 등 지역에서 긴급출동, 경범죄 · 무질서 행위 단속,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업무를 하는 유흥가 및 빌라촌 안전 위한 범죄예방팀 신설('21)
  - (수원시) 범죄예방팀을 운영하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신고가 9.98%, 5대 범죄 발생건수는 19.03% 감소하였고 특히 성범죄는 43.48% 줄어들었음('20)
  - (고양시) 화정로데오 거리 범죄예방팀 운영('21)

범죄예방디자인(CPTED) 도입



출처: 인천 미추홀경찰서, 원도심 밝히는 셉티드(CPTED) 사업 마무리(경기일보, '22.12.25)

- 미추홀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주민 설문 결과, 사업 전에 비해 범죄 불안 지표가 약 20% 감소, 또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등 5대 범죄율이 50%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 확인
  - (안양시) 도비와 시비 등 5억원을 투입해 안양 인덕원 유흥가 옆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22)
  - (양천구) 다가구 밀집지역 · 유흥가 중심 범죄예방 시스템 집중도입('22)
  - (청주시) 유흥가 · 원룸촌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18)
  - (미추홀구) 셉티드 기법을 적용하여 '수봉마을 안전하길 바래길 사업' 추진('22)

시민안전모델 출범 및 운영

출처: 부천원미경찰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부천 시민안전모델' 출범(전국매일신문, '23.10.04)

- 시민안전모델이 한발 앞서 시범 운영된 안산의 경우 범죄건수는 610건에서 521건으로 16% 감소
  - *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의 각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를 연결해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서로 협력하는 모델
  - (부천시) '부천 시민안전모델' 출범('23)
  - (용인시) 경기남부청 · 용인시, '시민안전모델' 출범('23)
  - (안산시) '안산 시민안전모델' 가동('24)

생활안전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지원사업

작업장 환경 및 시설개선

출처: 부산시, 봉제공장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 지원폭 확대(한국섬유신문, '21.01.13)

-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집진 · 환기시설, 휴게공간 등) 설치 및 개선(작업공간 개보수, 위험기계 교체 등) 지원
  (부산) 봉제 공장의 기계노후화, 노후배선,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열악해진 작업환경을 최신봉제기기 도입, 배선정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개선('2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기계 또는 노후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실시, 자부담 50%('21~'23)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출처: 경남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 확산 총력 (경남도민신문, '24.01.28)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을 지원
  (경남) 50인 미만 제조업(조선업 포함)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300명을 선정하여 보호구 지급('23)
  (당진시) 혹한기 야외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개선 상담 및 지원사업 진행, 19년도 12월에는 겨울 안전장화를 지급('20)

노후장비 교체 지원

출처: 안전투자비용 50%지원 최대7000만~1억원 (정보통신신문, '23.01.18)

- 고소작업대, 이동크레인 등 위험장비 · 기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 · 위험공정 개선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출처: 끼이고, 부딪히고, 깔리고, 제조업사고 예방법은 (경기일보, '23.06.27.)

-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AI 기반의 인체감지 시스템,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스마트 하역 운반기계 도입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 및 기술적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23)

생활안전

시설환경 개선 및 보호구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출처: 울산시, 장년 장애인 고용자 57가구 주거환경 개선 (뉴시스, '24.02.14)

-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교체 등의 교체를 통해 고령자의 안전확보
  (울산) 저소득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22년부터 추진 중, 문턱없애기, 휠체어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 총 48가구를 선정해 설치('23)
  (이천시)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안전하우징(가드레일 부착,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사업 실시('24)

어르신 안심주택(고령자 특화설계) 공급

출처: 서울시, 역세권에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 짓는다. 일부 분양도 허용 (서울경제, '24.01.30.)

- 낙상방지용 손잡이 설치, 높낮이차 없는 턱설계, 응급구조 요청 시스템 등이 설치된 고령자 맞춤 특화 설계 주택 공급
  (서울) 병원인근에 고령층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을 공급. 세부적으로는 화장실에 낙상방지용 손잡이 설치,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 설치, 주거공간 전체에는 높낮이차가 없는 턱이 설계되며 욕실과 침실에 동작감지 설비 설치된 주택공급('24)

LED 지팡이 보급

출처: 하동군, 어르신 장수사진 · 지팡이 보급호응 (경남일보, '15.07.30)

- 길이조절이 가능하고 LED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 밤길 낙상사고 예방이 가능한 지팡이 보급
  (하동군) 평소 걷기 불편한 어르신 350명을 대상으로 LED 라이트가 비치고 길이조절이 자유로운 지팡이 보급('15)

안전용품 대여지원

출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어르신 복지용구 무료로 빌려가세요 (부산일보, '16.05.03.)

-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사용하는 보행보조차, 수동휠체어 등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복지용품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낙상사고 예방
  (광산구) 근력과 균형 감각 저하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22)
  (부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행보조차,수동휠체어,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를 위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목욕 의자 등 11가지 복지 용구를 빌려주는 사업 실시('16)

생활안전

교육 캠페인

(낙상) 낙상예방 교육

출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요, 노인복지관 어르신, 낙상예방 교육 진행 (음성타임즈, '23.09.19.)

- 낙상대처법, 균형감각 및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법 등을 교육
  - (음성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받은 59명의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집안에서 주의해야 할 낙상대처법, 균형감각 및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법 등을 어르신들께 교육 실시('23)
  - (오산시) 혹한기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교육 실시('23)

(중독) 농약사고 예방교육

출처: 의왕시 농약사고 예방 위해 찾아가는 P.S 현장지원단 운영(머니S, '19.01.05)

- 실제 농약포장지, 농약병 등을 이용해 성분설명, 안전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
  - (의왕시) 정보에 취약한 고령농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초과시 처벌내용, 신규제도, 살포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배수 등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19)

고령농업인 농작업 안전교육

출처: 금산군, 안전사고 예방,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 진행 (동수축산신문, '20.05.29)

-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 지켜야 할 수칙, 올바른 작업방법 등을 교육
  - (금산군) 비단뫼사과작목회와 금산군 딸기연구회 회원들 40여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업 분야 위험예지 훈련 등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20)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출처: 포항시 송라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대경일보, '24.02.18.)

-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업시 유의사항, 응급 조치 등에 대해서 교육 실시
  - (포항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37명을 대상으로 작업시 유의사항, 응급조치 등을 교육('24)
  - (여주시) 11개월 동안 시가지와 체육공원 등의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무시 유의사항, 안전교육 실시('24)

자살

투신자살 예방사업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출처: 우리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됐습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2.11.01.)

-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 설치
  - (과산군)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제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군비 2,200만원을 투입해 6개 아파트 24개소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완료('23)
  - (포항 북구) 공동주택 옥상 투신을 방지하고자 북구지역 3개 아파트에 대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21)

교량 추락위험구간 CCTV 설치

출처: 경북소방, 구미대교 자살예방 CCTV 설치 (뉴시스, '24.02.23)

- 교량에 CCTV 설치 및 24시간 관제를 통해 자살시도자가 나타날 경우 현장대응
  - (구미시) 구미대교에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이상행동 감지시 자살을 만류하는 방송을 하는 동시에 소방서에 알림이 울려, 경찰,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함('24)

교량 스티커 부착

출처: 광주 광산소방서, 교량에 투신 사고 예방 스티커 부착 (아시아경제, '21.11.30.)

- 교량에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힘들고 지칠 때 들어줄게요' 등의 내용을 부착하여 자살시도 예방
  - (광산구) 광신대교, 산동교 난간에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번호 등의 자살예방문구 부착('21)

교량 난간 설치

출처: 한강다리 SOS 투신 막고자 난간 높이고 그물망에 철책까지 (아시아경제, '24.02.02)

- 극단적 시도를 막기 위해 올라서기 어렵도록 높은 난간 및 철책 설치
  - (서울) 마포대교에 높이 2.5m의 안전난간 설치되었고, 철사 간격이 10cm 이상 벌어지면 센서가 작동해 119구조대 출동('24)

감사합니다

Memo

Memo